

여린충남

THE CHUNGNAM INSTITUTE

충남연구원은 도민의 더 행복한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맑고 깨끗한 자연환경에서 역사와 전통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앞선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며
풍요롭고 건강한 정신으로 활기찬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충남도민의 모습입니다.

희망찬 충남의 미래를
충남연구원이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충남연구원
ChungNam Institute

우) 32589 충남 공주시 연수원길 73-26 (금흥동)
TEL. 041. 840. 1114 FAX. 041. 840. 1129 <http://www.cni.re.kr>

여린충남

2021 SPRING Vol. 92

충남연구원 「여린충남」 2021년 통권 92호
국제연속표준간행물 [ISSN] 1226-637X 비매품

Vol.92

2021 SPRING

권두언

'더 행복한 충남, 대한민국의 중심'에 서서

특집

교육 분야 교육 생태계 변화에 따른 체질 개선

문화예술 분야 수사에서 실제로: 뉴노멀 문화정책의 과제

산업경제 분야 새로운 소비경제 변화와 전략

복지 분야 코로나19시대의 사회변화와 지역복지의 방향

현안연구

충남 광역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 재정립 연구

충남의 깨끗한 해양환경 만들기 추진 성과와 평가

공주문화도시 조성계획에 따른 문화영향평가 사례와 시사점

여린 충남

충남연구원
ChungNam Institute

충남연구원
ChungNam Institute



발행일 2021년 3월 발행인 윤황 발행처 충남연구원 편집위원장 이인희 편집위원 권미정, 김진영, 백운성, 여형범, 윤정미 에디터 윤승구, 정봉희
주소 우) 32589 충남 공주시 연수원길 73-26 (금홍동) 전화 041.840.1114 팩스 041.840.1129 홈페이지 <http://www.cni.re.kr> 편집·제작 승일미디어그룹(주)

문의사항은 plebs9@cni.re.kr로 연락바랍니다.

#권두언

04 '더 행복한 충남, 대한민국의 중심'에 서서

#특집

- 08 1. **교육 분야** 교육 생태계 변화에 따른 체질 개선
2. **문화예술 분야** 수사에서 실제로: 뉴노멀 문화정책의 과제
3. **산업경제 분야** 새로운 소비경제 변화와 전략
4. **복지 분야** 코로나19시대의 사회변화와 지역복지의 방향

#현안연구

- 26 1. 충남 광역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 재정립 연구
2. 충남의 깨끗한 해양환경 만들기 추진 성과와 평가
3. 공주문화도시 조성계획에 따른 문화영향평가 사례와 시사점

#열린이슈

48 놀이가 좋아 모인 엄마들의 이야기

#오피니언

- 52 1. 포스트 코로나와 로컬뉴딜: 마을민주주의와 지역순환경제
2. 코로나 낙인

#해외리포트

58 함부르크 하펜시티(Hamburg Hafencity): 함께 아이를 키우는 도시

#인권 A to Z

62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읽기

#연구원 소식

70 충남연구원, 연구성과 발표회 등

#충남의 풍경

75 태안 천리포수목원



권두언 >>>

‘더 행복한 충남, 대한민국의 중심’에 서서

윤황 | 충남연구원 원장

충청남도 양승조 지사는 제102주년 3.1절 기념사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 조국 독립을 위한 선열들의 투쟁은 지칠 줄 몰랐고, 역사를 믿고 시대를 믿고 미래를 향해 세계를 향해 힘차게 나아갔다. ... 3.1운동을 통해 임시정부가 건립됐고, 비로소 제국은 민국으로 또 백성은 시민으로 거듭나게 됐다. ... 독립운동의 발원지 충남이 새 시대로의 번영을 이룩하는 데 앞장서며, 저출산·고령화·사회양극화 등 사회통합을 해치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는데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 ...”

그렇다!

현재 대한민국의 사회통합을 해치는 시대적 과제는 바로 저출생화(低出生化), 인구고령화(人口高齡化), 사회양극화(社會兩極化)의 3대 위기문제에 집중되고 있다. 이 3대 위기문제가 극복되지 않으면 충남은 물론 대한민국의 미래도 암담할 뿐이다. 이에 양승조 지사는 충남에서부터 이 3대 위기 극복의 선도적 모델을 시작하고자 민선 7기의 출범과 함께 “더 행복한 충남, 대한민국의 중심”의 충청남도 비전을 설정하고 5대 도정목표와 20대 전략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저출생화, 인구고령화, 사회양극화의 위기 극복을 위해 양승조 민선 7기 도정은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어른이 행복한 충남, 더불어 잘 사는 충남’의 방향에서 전국적인 선도정책모델을 다음과 같이 실행해오고 있다.

첫째, 저출생화 극복을 위한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의 방향에서 ‘충남형 아기수당 지급, 직장 연합 어린이집 설립 지원, 고교 무상교육 및 무상급식 실현, 청년과 신혼가정을 위한 사회적 주택 5,000호 공급’ 등이 추진되고 있다. 둘째, 인구고령화 극복을 위한 ‘어른신이 행복한 충남’의 방향에서 ‘75세 이상 어르신의 버스비 무료, 독거노인 돌봄 서비스 운영, 노인 자살 예방 프로그램 운영 확대, 노인 일자리 장려금 지급’ 등이 추진되고 있다. 셋째, 사회양극화 극복을 위한 ‘더불어 잘 사는 충남’의 방향에서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공공주택 1만 5,000호 건설, 장애인 콜택시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 다문화 교류와 다문화 축제 지원, 글로벌하우스 지원센터 설립’ 등이 추진되고 있다.

위와 같이 전국적인 선도정책모델에서 행복키움수당(충남아기수당) 지급, 3대 무상교육 실시, 소상공인 4대 사회보험료 지원, 전 도민안전보험 가입, 75세 이상 어르신·장애인·국가유공자 및 유족 버스비 무료화, 영유아 교통안전용품 지원, 충남농어민수당 지급, 충남행복주택 공급, 더행복충남론 출시 등이 대표적 사업들이다. 이 사업들은 ‘더 행복한 충남, 대한민국의 중심’에 서서 ‘더불어 행복한 복지수도 충남, 더불어 잘사는 행복중심 충남’을 만들겠다는 양승조 지사의 정치신념이 연결된 것이다. 그의 정치신념과 행복추구권 달성의 궁극적 목표지향성을 가진 포용적 행복국가건설에 대한 신념체계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포용적 행복국가란 한마디로 행복추구권이 달성된 국가를 뜻한다. 이의 행복추구권 달성은 우리나라 <헌법> 제10조에서와 같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고” 생활권, 환경권, 사회권, 경제권, 생명권, 신체권, 문화권, 개인권(명예권·성명권·초상권 등), 자유권, 생존권 등 모두가 행복의 추구 및 실현을 위한 권리를 확보하는 상태에 도달하는 것이다. 이는 곧 모두가 차별 없이 사람이 사람답게 더불어 함께 행복하게 잘사는 국가로 나아가자는 것이다. 이에 5대 충남도정목표도 “따뜻하고 안전한 공동체, 풍요롭고 쾌적한 삶, 활력이 넘치는 경제, 고르게 발전하는 터전, 도민이 주인 되는 지방정부”라는 것으로 제시된 배경이다.

그렇다면 ‘더 행복한 충남, 대한민국의 중심’에 서서 충남연구원은 양승조 민선 7기 도정 방향에 발맞춰 어떤 정책의 개발에 매진할 것인가? 이에 대한 해답을 구하고자 이번에도 정책연구소식지로 <열린충남> 통권 제92호가 발간된 것이다. 이번 제92호에서는 풍성한 정책공간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집 주제인 “코로나19, 우리의 삶이 변화한다”를 시작으로 △교육생태계 변화, △뉴노멀 문화정책 과제, △새로운 소비경제 전략, △코로나19 시대의 지역복지 방향 등이 정책의 창을 두드리고 있다. 현안연구에서는 △충남 광역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충남의 깨끗한 해양만들기, △공주문화도시 조성계획 등이 눈을 비비게 만든다. 열린이슈에서는 놀이가 좋아 모인 엄마들의 이야기가 고소하게 펼쳐지고 있다. 오피니언에서는 포스트 코로나와 로컬뉴딜, 코로나 낙인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해외리포트에서는 함께 아이를 키우는 도시, 함부르크 하펜시티(Hamburg Hafencity)가 소개되고 있다. 특히 <인권 A to Z>에서는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읽기”가 지식 영양가를 더해주고 있다.

앞으로도 우리 연구원은 ‘더 행복한 충남, 대한민국의 중심’에 서서 연구의 대장정을 흔들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이다. 우리 연구원이 가는 길, 그 길이 충남도민과 충남의 미래를 향하는 길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지치지 않고 전진해왔듯이, 특히 지난해 대내외적 도전위기 속에서도 추후도 흔들리지 않고 낮이나 밤이나 매일 함께 연구실의 불을 켜고 연구원을 지켜왔듯이, 그렇게 전진해 나가리라. 우리가 가는 길, 그 길은 정책연구를 통해 열린충남, 열린세상을 향하는 지점이다. 해서 우리 충남연구원은 자타가 공인하듯이 최고 지방연구기관이자 대표 싱크탱크로서 당당하게 위치하고 있다. 이젠 어깨를 더 펴고 보다 더 크게, 더 넓게, 더 멀리 보고 함께 가자! ‘더 행복한 충남, 대한민국의 중심’에 서서!!



특집

- 01 교육 분야 교육 생태계 변화에 따른 체질 개선
- 02 문화예술 분야 수사에서 실제로: 뉴노멀 문화정책의 과제
- 03 산업경제 분야 새로운 소비경제 변화와 전략
- 04 복지 분야 코로나19시대의 사회변화와 지역복지의 방향



특집

01

교육 분야 교육 생태계
변화에 따른 체질 개선

송두범 | 충남연구원 지역도시·문화연구실 수석연구위원

2019년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한 호흡기 감염질환인 COVID-19(이하 코로나19)는 전 세계로 확산하면서 인간이 당연하게 여겨왔던 삶의 양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전환점이 되었다. 사람들 간의 대면접촉이 차단당한 채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지니고 있는 사회성과 인간성이 흔들리고 있다.¹⁾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는 인간이 자연과 생태계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상기시키면서 생태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고 있다. 코로나19는 경제-사회-생태가 근원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시켜 주었고, 향후 인류는 탈성장의 가치를 지향하면서 생태적 감수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을 알려주었다.

반면 코로나19로 인해 혐오와 차별이 심화되었고, 공동체보다 개인의 생존을 우선시하는 ‘각자도생’의 경향이 확산되고 있다. 코로나19는 물질주의와 개인주의 성향을 부채질하고 있는 것이다. 공동체보다 개인의 생존, 연대와 협력보다 경쟁과 자원을 중시하는 경향이 나타나면서 고립과 연대를 선택해야 할 시점에 와 있는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의 삶이 통째로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교육도 예외는 아니다. 코로나19가 미친 교육영역의 변화를 살펴보고, 포스트 코로나 이후 교육이 나아갈 방향은 무엇인지에 대해 성찰해보고자 한다.

코로나19가 가져온 학교교육의 변화

코로나19는 사회적 위기, 경제적 위기, 교육적 위기, 인간성의 위기로 확대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은 교육의 언택트(Untact)화를 가속화시켰고, 배움의 지체와 교육격차를 심화²⁾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언택트 현상은 공교육의 정상적인 운영도 불가

1) 조윤정·박휴용. 2020. 코로나19와 교육: 교사전문성에 주는 시사점. 이슈페이퍼 2020-12. 경기도교육연구원.

2) 조윤정·박휴용. 위의 글.



능하게 만들고 있다. 또한 비대면 온라인 수업환경 속에서 저소득층, 사회적 취약계층 가정의 학생들은 배움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면서 배움의 지체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조사에 의하면³⁾ 비대면 수업에 따른 학습격차는 가정의 경제수준에 따라 확대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첫째, 가정경제 수준에 따라 원격수업 환경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가정경제 수준이 낮을수록 원격수업 집중이 어렵고, 원격수업을 위한 전용기기 소유 및 성능 측면에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둘째, 원격수업에 대한 이해도와 학습과정에서도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보호자가 온라인 학습지원과 지도를 더 잘하고 있었고, 학습의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사교육을 통한 학습지원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셋째, 돌봄 공백에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보호자 없이 낮 시간을 보내고, 건강에 대한 염려,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교하지 않는 날 우울감이 더 높아져서 심리상태에서도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비대면 온라인 수업이 불가피하게 시행되면서 대학은 운영위기, 학교는 학사 운영 환란에 고스란히 노출되고 있다. 부분적 온라인 학습은 지금까지 문제없이 이루어졌으나 공교육 전체에 전면적으로 적용하면서 접속장애, 교육기회불균형, 교사 및 학생 사생활 노출, 저작권 침해, 학습효율성 저하 등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발생하였다.⁴⁾

이제 코로나19로 인해 시행된 비대면 교육의 경험과 교훈을 살려, 공교육의 기능과 역할 등 교육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새로운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다. 우선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제기된 학습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비대면 수업의 질을 담보하면서도 교육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이다.

3) 이정연. 2020. 코로나19와 교육: 학교구성원의 생활과 인식을 중심으로. 경기도교육연구원.

4) 오재호. 2020. 코로나19가 앞당긴 미래, 교육하는 시대에서 학습하는 시대로. 이슈&진단. 421. 경기연구원.

코로나19로 인한 평생교육 생태계의 변화

우리나라 평생교육 참여율은 2007년 20% 초반에서 2019년 41.7%까지 꾸준히 상승했지만, 내부적으로 소득수준, 학력, 성별격차가 오히려 확대되었다. 참여하는 시간이 늘어났지만 그 질은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020년 국가평생교육통계 조사결과에 따르면, 1명당 평생학습에 투자하는 비용과 시간은 전년보다 크게 줄어들었다. 1인당 연간 투자시간은 2019년 평균 97시간에서 2020년 평균 76시간으로 21시간 줄었고 연간 투자비용은 평균 48만 원에서 36만 원 수준으로 감소했다.

코로나19의 확산과 장기화로 평생교육에 참여하던 1천 635만 명(2019년 기준)의 성인학습자들이 학교나 평생교육 시설 등의 교육프로그램에서 학습을 이어갈 수 없게 되었으며, 전 세계적으로도 수억 명이 넘는 성인학습자들이 평생교육 기회를 박탈당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집합교육이나 대면교육보다 개인 또는 가족중심의 생활패턴으로 바뀌고 온라인 평생교육이나 소수가 모이는 공동체 중심의 교육으로 전환되고 있어 집합교육 중심의 우리나라 평생교육은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⁵⁾

학교 교육이 비대면 원격수업으로 진행되고 있다면 평생교육은 그 특성상 비대면 온라인 수업이 어렵다는 면에서 코로나19로 인한 폐해는 더 크다 할 것이다. 특히 고령층을 비롯한 소외계층이 겪는 온라인 소외는 격차를 더욱 더 확대하고 있는 것이다.

평생교육이 이루어지던 평생교육관, 주민자치센터, 복지관 등의 수많은 평생학습시설들이 폐쇄되고, 프로그램은 잠정 연기되거나 취소되었다. 평생학습시설에서 강의를 하던 강사들도 수입이 끊겨 생활고를 겪고 있다. 코로나19는 국민의 평생교육기회의 박탈을 넘어서 교육을 담당해왔던 강사들에게는 생존의 문제가 되고 있다. 코로나19는 평생교육 생태계 전반을 변화시켜 버린 것이다.

반면 원격교육의 문이 본격적으로 열렸다는 평가가 나오고, 온오프라인 교육이 혼합된 블렌디드 러닝(Blended Learning)이나 온라인 선행학습 이후 오프라인에서 토론을 벌이는 플립러닝(Flipped Learning)이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학교교육의 방향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학교교육의 방향은 학습자의 주도성, 생태적 전환의 실천, 디지털 시민성과 세계 시민성 등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져야 한다.⁶⁾

첫째, 학습자의 주도성을 살리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수업에서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차이'로 인해 학습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의 강화하기 위해서는 문제해결 중심의 프로젝트 방식의 수업, 학생이 설계한 교육과정으로 학교를 여는 언팩스쿨(Unpack

5) 김홍섭. 2020. 코로나19 이후 평생교육 과제와 전망. 월간 공공정책, 178.

6) 조윤정·박효용. 앞의 글.

School), 학습동기를 높이는 교육, 상호작용과 소통을 강화하는 교육, 협력을 촉진하는 교육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둘째, 생태적 전환을 실천하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사회-생태의 근원적 연결성과 상호의존성의 중요성에 대해 확인하게 되면서 인간과 자연이 공생하여 존재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교육을 생태학적 관점으로 접근하는 생태적 전환이 필요하고, 학교는 생태적 전환을 위한 실천의 장과 리빙랩이 되어야 하며,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해 학교가 순환경제로 전환하는 구심점이 되어야 한다.

셋째, 디지털 시민성과 세계시민성을 키우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코로나19는 스마트기기, 에듀테크 등에 대한 교사별 역량 차이에 따른 수업격차의 문제를 노정하였고, 온라인상의 전 세계적 이슈가 사회적 의제가 되고 있다. 다양한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접근능력, 표현능력, 소통능력 뿐 아니라 디지털시대의 권리와 책임, 참여, 에티켓, 소속감 등 디지털 시대를 잘 살아가는 능력을 갖추 수 있도록 디지털 시민성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비대면 상황에서는 지역사회와 세계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 지역사회와 세계의 상호의존성과 상호연결성을 이해하는 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학생들이 세계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학교교육의 방향을 실천하기 위해서 교사는 지식전달자가 아니라 학습촉진자(Facilitator)로서의 역할이 더욱 강조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AI보조교사와 같은 첨단 테크놀로지가 교육현장에 활용되기 시작하면 학습자 중심의 수업에 대비하기 위해서 교사는 교과전문지식, 학생에 대한 심리발달적 특성에 대한 이해, 다양한 교수법 관련 역량 개발 등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⁷⁾

**포스트 코로나 시대
평생교육의 방향**

포스트 코로나 시대 평생교육의 방향은 인간성회복, 온라인학습체제 구축, 다양한 정보공유, 사각지대 지원, 디지털 리터러시교육 강화 등이 요구된다.⁸⁾⁹⁾

첫째, 평생교육은 교양 및 기능중심에서 탈피하여 인간성을 회복할 수 있는 교육체제로 전환되어야 한다. 코로나19로 인한 혐오와 차별, 공동체 보다 개인우선 경향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습자와 교수자, 학습자간의 인간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교육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평생교육의 중요한 과제이다.

둘째, 온라인 교육, 원격학습 등 새로운 평생교육을 위한 온라인 학습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대

7) 김자영 외. 2020. 코로나19와 미래핵심역량 : 디지털 리터러시,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협업능력을 중심으로. 기술보고 2020-05. 경기도교육연구원. 207.
8) 옥장흠. 2020. 코로나19시대 평생교육의 과제, 더more웹진 9월호.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9) 김홍선. 앞의 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충남교육의 과제**

LMS(Learning Management System)개발 등 학습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평생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학습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다만, 원활한 온라인 수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저작권 문제가 우선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개인주도 학습을 위한 환경과 프로그램 개발 등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코로나 이후 가족과의 대면·접촉 기회의 확대에 따라 가족 모두가 함께 모이고, 배우고, 나누는 가족 평생교육의 될 수 있도록 기회 제공확대와 지원이 필요하다.

넷째, 평생교육이 사각지대에 살고 있는 평생교육학습자들을 발견하여 다양한 교육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평생교육의 접근이 어려운 학습자들에 대해 스마트 미디어 구입 및 프로그램 수강료 등을 지원함으로써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회복해 주어야 한다.

다섯째,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미디어 문해력) 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디지털 매체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인간의 경험과 정보를 입력하는 특수한 구조로 이해되어야 한다. 또한 디지털 미디어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네트워크 공동체에서 소외될 가능성 있다. 이러한 점에서 디지털 리터러시는 디지털 시대의 평생학습과 삶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역량이 되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충청남도도 전통적인 수업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우선 감염병이 보편화하는 세상에 대응력을 갖춘 공교육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 충청남도도 시군은 온라인 학습 여건을 갖추지 않은 가정에 디지털 디바이스와 인프라를 보급함으로써 공정한 학습기회를 누리도록 지원해야 한다. 정보격차가 교육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취약계층을 위한 스마트 기기와 인터넷, 독립된 플랫폼과 콘텐츠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충청남도도 교육청은 공교육 학습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 및 보급함으로써 교사와 학생(도민)의 선택 폭을 넓히고 궁극적으로 성인학습에 초점을 맞추었던 기존 평생학습 생애주기 외연을 청소년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한국판 뉴딜의 대표추진과제인 그린 스마트 스쿨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모든 학교의 공간리모델링을 기반으로 디지털 인프라 환경구축을 위한 무선 인터넷 구축과 노후된 디바이스 교체, 온라인 콘텐츠를 활용한 교과서 선도학교 운동 등을 충청남도도 교육청, 시군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재정확보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도교육청 연수원 등에서는 모든 교육과정에 기본 디지털 리터러시 과정뿐 아니라 교과와 연계된 교수·학습 전략 측면에서의 디지털 활용에 대한 연수를 강화함으로써 교사의 디지털 미디어 활용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집

02

문화예술 분야 수사에서 실제로: 뉴노멀¹⁾ 문화정책의 과제

장세길 | 전북연구원 사회문화연구부 연구위원

박철희 | 충남연구원 지역도시·문화연구실 선임연구위원

코로나19로 무너진 지역 문화 생태계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시행되면서 가장 큰 피해를 본 업종이 예술·스포츠·여가 분야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서비스업 산업(생산)활동 자료(2020.03)에 따르면, 예술·스포츠·여가 분야는 전월 대비 -27.2%, 전년 동월 대비 -17.9%가 감소하였다. 예술 분야는 1인 사업체, 계약직, 일용직 비율이 높아(평균 70% 내외) 고용 안정성이 매우 취약하다. 생계와 다름 없는 문화행사가 모두 취소 되고 대면 교육마저 중단되면서 문화·예술인은 무기한 휴직과 실직에 직면하였다.

문화향유가 삶의 질에 필수적이라는 문화계의 목소리는 코로나19에 힘을 잃었다. 「문화기본법」에 명시되었듯이, 인권으로서 문화적 권리를 내세우며 문화향유정책을 확대하였으나, 위기가 닥치자 문화 향유는 인권이 아니라 단지 여유 있는 사람의 취향에 불과하였다. 정부 또는 개인이 알아서 문화활동을 가장 먼저 취소하였다. 정부가 지원하는 행사가 끊기고 개인 활동(관람과 참여)마저 멈추면서 수십 년간 쌓아온 지역 문화계의 기반이 흔들렸다.

정부는 지역 문화계의 위기에 관심을 두기 어려웠다. 법률적으로 보면 중소기업이나 상공인이 아닌 문화예술 프리랜서에게 재난지원금은 남의 이야기였다. 지자체는 할 일이 더 없었다. 재난 시기에 지역 문화계에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법적 근거가 없고, 긴급히 지원할 대상으로 보지 않았다. 정부나 지자체에 문화는 현대사회의 필수요소가 아니라 취향을 원하는 이들에게 제공하는 선택적인 서비스이었다.

1) 뉴노멀(New Normal)이란 '사회적으로 새로운 기준이나 표준이 보편화되는 현상을 이르는 말'로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새롭게 나타난 세계경제의 특징을 통칭하는 말이다. 2008년 이전까지는 규제 완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증권화 및 파생 상품시장 확대 등의 금융혁신으로 금융산업이 큰 폭으로 성장하며 고위험 투자가 증가한 시기였다. 이러한 고위험 투자의 확대는 경제성장의 동력이 되기도 하였으나 이로 인한 부동산의 가격거품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불러오는 주요한 원인이 됐다. 이후 나타난 세계경제의 특징은 금융 규제 강화, 금융기관들의 고위험 투자 축소, 환경문제 개선을 위한 저탄소 경제의 등장, 저성장 진입, 미국 중심의 세계경제 질서에서의 탈피 등 새로운 경제 질서가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을 통칭하여 '뉴노멀'이라 부른다. 뉴노멀의 시대에는 전 세계경제가 저성장 국면에 진입함에 따라 가계들은 부채를 줄이고, 소비와 투자도 축소하게 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하여 그간 경제학이 가정해 온 합리적 인간, 경제의 효율성이 큰 도전을 받았으며, 위기의 원인이 인간의 탐욕, 정부의 지나친 시장 방임 등에 있다는 지적에 대한 대안으로 경제학에 심리학 등을 접목시킨 행동경제학이 새롭게 부상하였다. [네이버 지식백과]

팬데믹이 불러온 문화자치의 가능성: 수사에서 실제로

지역 문화계에 속한 이들은 정부(와 지자체)만 바라보았다. 평소에 공공재라며 공적 지원을 외쳤던 것만큼 위기 상황에서 긴급한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사회가 요구하는 문화의 공익적 활동에는 큰 관심을 두지 않았다. 환경 변화에 적응하기보다 익숙한 방법으로 활동을 이어가려 했고, 위기가 닥치자 준비하지 못한 '미래의 역습'(예, 디지털화)에 맥없이 무너졌다.

이러한 현상이 빚어진 이유는 정부나 지역 문화계가 문화(활동)를 여전히 선택적 복지서비스로 바라보는 데 있다. 고급예술 접근성을 사회적 약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고급예술을 의미 있는 문화로 대상화하여 사회적 형평주의 수단으로 삼는 정책이다. 하지만 지역 문화는 통제하거나 우열이 있는 대상이 아니라 공유하는 환경이다. 주민이 누리는 모든 문화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 문화를 지역주민이 공유하면서 누리는 것, 즉 지역 문화는 하나의 생태계이다.

지역 문화계에서는 늘 생태계를 강조한다. 공적 지원에 목을 매서는 안 되며, 지속할 수 있는 생태계를 민·관이 협력하여 구축해야 한다고 말한다. 생태계는 정책이 주도하는 게 아니라 주민이 주체이며, 삶의 필수요소이므로 위기가 닥쳤다고 해서 한꺼번에 무너지지 않는다. 지역에 맞는 생태계가 구축되면 굳이 정부 지원에 목을 맬 필요가 없다. 그런데 정부나 지역 문화계가 늘 강조하던 것과 달리, 지역 문화 생태계는 구축되지 않았다. 이것이 팬데믹에 지역 문화계가 속절없이 무너진 이유이다.

문화를 대상으로 삼아 수단화하는 전략이 '문화의 민주화'(Democratization of Culture)이다. '문화민주주의'(Cultural Democracy)는 지역 문화를 수단이 아니라 환경으로 이해하며, 모든 문화를 우열 없이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주민이 주체가 되어 참여하는 생태계로써 문화를 강조하는 전략이다. 문화의 민주화의 대안적 개념인 문화민주주의는 1990년대 우리나라에 알려진 뒤로 문화정책의 핵심전략이 되었다. 하지만 문화민주주의의 구호만 앞섰지 핵심 가치는 실현되지 않았다. 코로나19로 맥없이 무너진 지역 문화계가 대표적인 사례로, 수사학에 불과한 문화민주주의이었다.

문화민주주의는 미학적 질을 중요시하는 문화의 민주화와 달리 사회적 질을 강조하며, 예술적 결과물(Products)보다 예술을 포함한 문화활동의 과정(Processes)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얼마나 미학적으로 훌륭한 작품을 창작했느냐보다 예술활동에 참여하면서 얻게 되는 감수성(창의성) 증진과 치유 효과, 사회적 가치의 창출이 중요하다. 이러한 인식이 정부와 지역 문화계에 확고하고, 활동이 활발하였다면 모두가 코로나블루로 힘들어하는 시기에 문화정책이 소외당할 리 없다.

문화민주주의와 더불어 강조되는 개념이 '문화자치'이다. 정부에서는 지방분권에 따라 문화 분야의 분권을 문화자치로 설명하지만, 지역 문화계에서 말하는 문화자치는 더 근본적인 개념이다. 단순히 문화정책이 지방으로 이양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 문화가 이루려는 비전을 의미한다. 지역 문화 생태계는 문화자치의 핵심이며, 문화민주주의는 지역 문화 생태계를 구축하는 전략이다. 다만 문화민주주의처럼 문화자치 역시 수사에 불과하였다는 것이 문제이다.

그런데 수사만 난무하던 지역 문화계에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기반이 붕괴하는 현실과 더불어 실제로서 문화자치의 가능성을 보이는 의미 있는 활동이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촉발한 지역 문화 위기를 지역(주민) 스스로 돌파하려는 노력이 지역 문화 생태계를 구축하는 문화민주주의 전략과 현대사회에 대한 문화의 공적 기능을 실천하는 활동으로 이어졌다. 위기에서 새로운 미래의 가능성이 엿보이고 할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문화계에 관심을 두지 않자 지역 문화계 일부는 스스로 위기를 돌파하는 연대를 시작하였다. 한 예술가가 자기가 가진 전 재산 100만 원을 후원하여 필요한 2명에게 50만 원씩 이유 없이 주는 것에서 시작하여 여러 예술인에게 확산한 ‘오아시스 딜리버리’, 이를 참조하여 지역 내에서 시작한 후원 릴레이가 이어졌다. 재난 위기에서 지역의 독자적인 위기대응체계를 마련하고 법적 근거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미학이 아닌 치유가 목적인 활동이 나타났다. 문화활동으로 이웃의 생사를 확인하고, 서로 치유하면서 새로운 사회자본이 형성되었다. 온라인에서 이어진 작은 문화 꾸러미 활동이지만,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한 아이와 노인에게 소중한 시간이었고, 문화가 존재론적 위기에 처한 현대인에게 할 수 있는 무언가를 확인해주는 일이었다.

이처럼 팬데믹은 지역 문화 위기를 불러옴과 동시에 수사에 그친 문화자치를 실제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공적 지원을 받아 예술적 결과물에 집중하던 일상적 활동이 비일상적 위기에 무너지자 지역 스스로 위기를 극복하는 활동을 이어갔고, 실체로서 문화자치의 가능성이 엿보인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팬데믹이 불러온 여러 사례를 통해 뉴노멀(New Normal) 시대의 문화정책을 구상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 문화의
공적 기능과
뉴노멀 문화정책 방향

김기봉(2020)은 포스트 코로나 뉴노멀 문명을 ‘문명의 생태적 전환(공생)’, ‘근대 발전주의 문명 공식의 해체’, ‘디지털 공간으로의 전환’으로 설명한다. 이처럼 뉴노멀은 근대 발전주의 문명의 해체, 공생과 공존, 앞당겨진 디지털 사회 등으로 이야기된다. 그런데 뉴노멀과 관련된 문화정책 논의는 주로 ‘디지털’에 제한된다. 사회적 거리 두기에 따른 해결방안으로 온라인 콘텐츠, 비대면 예술활동 등을 제시한다. 기술적 접근으로 위기를 해결하려는 뉴노멀 전략은 팬데믹이 종료됨과 동시에 사라질 수 있다. 진정한 뉴노멀은 발전주의 문명을 해체하고 생태적으로 전환하는 ‘공생과 공존’이다. 지역 문화 구상도 기술적 접근을 넘어 본질적 접근이 필요하다.

첫째, 지배하는 문화가 아닌 공생하는 문화로써 문화자치를 실천해야 한다. 중앙-지방, 고급-저급으로 이분화되었던 문화전략은 중앙과 고급이 지방과 저급을 지배하는 방식이었다. 그래서 늘 중앙에서 지역은 문화적으로 종속되었다. 뉴노멀 시대에는 문화의 생태계가 중요하다. 생태계라는 수사에 불과하였던 문화자치가 실체로서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는 문화민주주의 개념과 밀접하게 연계된다.

고급예술의 대중화와 활동의 결과를 강조하던 문화의 민주화와 달리 문화민주주의는 모든 문화의 가치를 존중하며 결과가 아닌 참여와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한다(Langsted, 1990:58). 근대 발전주의 문명이 아닌 공존의 가치가 문화민주주의 전략에 담겨 있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은 문화민주주의 개념이 출발한 미국·유럽 사회와 문화적 배경이 다르다. 한국적 문화민주주의 전략이 필요하며(장세길, 2015:47-49), 한국의 지역 문화에 적용하는 새로운 접근이 요구된다.

둘째, 뉴노멀 가치와 문화자치 방향을 포괄하는 문화다양성(Cultural Diversity)을 지역에서 실천하려는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 세계인권선언(1948)의 문화적 권리에서 출발한 문화다양성은 시대적 맥락에 따라 이해와 실천을 달리한다. 2005년 유네스코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당시만 해도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대항하는 유럽국가 논리가 강조되면서 민족국가의 문화상품을 보호하려는 경향이 강했다. 2001년 발표된 문화다양성선언과 달리 2005년 협약에서 문화상품성과 표현의 문제에 초점을 맞춘 ‘문화의 경제성’이 강조된 이유이다.

문화다양성은 인권적 측면에서 소수집단 문화에 집중해야 한다. 문화다양성 개념이 시대에 따라 맥락적 이해와 실천을 달리했다는 점에서 뉴노멀 시대의 지역적 맥락에 따라 개념과 실천이 정립되어야 한다. 즉 공존과 공생의 가치를 실천하는 핵심 개념으로써 문화다양성이 뉴노멀 문화자치 시대에 적용되는 방안을 고민할 때이다.

셋째, 현대사회에서 요구되는 문화의 공적 기능을 정립하고, 관련 정책과 사업을 발굴·실천해야 한다.

지금까지 문화정책에서 문화활동을 지원하는 목표는 개인적 취향과 관련된다. 이는 사회의 공익적 가치라는 측면에서 보면 정책지원의 논리가 미흡하다. 사회복지 개념과 복지국가가 역사적으로 시장 중심 자본주의 위기로 나타난 사회적 ‘위험’(예, 실업, 산재)에 대응하며 등장했듯이, 문화는 현대사회의 ‘위험’을 해소하는 대응으로서 그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

기든스가 말하는 “존재론적 안전에 대한 불안감”(Giddens, 1991), 벡(Beck, 1998)이 지적하는 “현대사회의 불확실성” 속에서 현대인은 타인과 소통하고 공감을 형성하는 노력을 기울이기보다 경쟁에서 살아남으려 자기 성과달성에 매달리는 “피로사회”(한병철, 2010)에 산다. 현대인은 개인적으로 파편화되어 사회적 신뢰와 공동체 의식(문화)을 형성하는 토대를 갖추기 어렵다. 문화활동으로 문화적 공감력, 구성원 간 이해와 소통을 원활하게 하여 강한 신뢰 관계를 구축하고, 존재론적 안정감을 느끼도록 만들어 사회적 위기에 대응하는 것, 뉴노멀 시대에 ‘문화’가 중요한 이유이다.

팬데믹은 감염병 불평등을 심화시켜 현대사회의 불안감을 확대하였다. 일상은 무너졌고 공동체적 유대가 약해졌다. 포스트 코로나에서 무엇보다 중요하게 회복탄력성(Resilience)이다. 문화는 “개인의 심리적 회복탄력성(Individual Psychological Resilience)과 공동체의 회복탄력성(Community resilience)을 형성하고 구축한다”(양혜원 외, 2020:55). 특히 장소성을 가지는 지역 문화단체는 개인과 공동체의 회복탄력성에 뺄놓을 수 없는 존재이다. 문화단체와 문화공동체의 공동체적 활동은 사회적 자본을 회복하여 지역구성원이 존재론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팬데믹으로 약해진 지역정체성과 유대 관계를 강화한다. 코로나블루를 치유하는 핵심적인 수단이 문화인 것이다. 결국 지역 문화에 대한 투자는 사회의 회복탄력성에 대한 투자이다.

디지털로 대변되는 포스트 코로나에서 지역 문화계가 경쟁력을 가지려면 기술적 접근이 필요하다. 비대면 문화콘텐츠를 개발하고, 온라인을 활용한 문화활동을 활성화하는데 정책적 관심이 쏠린 이유가 이 때문이다. 하지만 문화의 진정한 공적 가치는 뉴노멀 문명, 즉 공존과 공생의 생태적 문명을 실천하는 핵심 수단이며, 지역 문화인단체가 그 동력이라는 데 있다. 코로나19로 어느 때보다 청년의 자살률이 높아진 지금, 문화정책을 담당하는 정부와 지자체, 문화단체와 공공기관 모두가 코로나블루 치유와 같은 사회의 회복탄력성을 확보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하는 이유이다.

Ⅰ 참고문헌 Ⅰ

- 김기봉, 2020, “포스트 코로나 뉴노멀과 신문명 패러다임”, 『철학과 현실』, 126:105-130.
- 양혜원 · 김면 · 차민경 · 김현경 · 노수경, 2020, 「코로나19가 문화예술 분야에 미친 영향 및 정책대응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정책연구 보고서.
- 장세길, 2015, “문화민주주의를 넘어”, 『지역사회연구』, 23(2):45-63.
- 한병철, 2010, 『Mudigkeitsgesellschaft, 김태환 역(2012), 『피로사회』, 서울: 문학과지성사.
- Beck, Ulrich., 1998, World Risk Societ, Cambridge: Polity Press.
- Giddens, Anthony., 1991, The consequences of modernity, Cambridge: Polity Press.
- Langsted, jom., 1990, “Double Strategies in a Modern Cultural Policy,” The Journal of Arts, Management and Law, 19(4), 53-71.



특집

03 산업경제 분야 새로운 소비경제 변화와 전략

유원중 ! 당진전통시장 문화관광형시장육성단 단장(경영학박사)

소비경제 패러다임의 변화

서로의 삶에 필요한 것을 물물교환하던 시대 이후 화폐가 사용되면서 재화와 서비스를 판매하는 사람과 구매하는 사람이 모이는 시장(市場)이라는 공간은 상업경제의 근간이 되었다.

교통과 통신의 발전에 따라 사회, 문화적 생태계도 변화한다. 그에 따라 사람들의 라이프스타일도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그 시기의 재화와 서비스 역시 바뀌게 된다. 이를 우리는 소비트렌드라 부른다. 또한 시장의 작은 개념의 공간을 소비플랫폼이라 할 수 있다. 재화와 서비스가 소비자에게 유통되는 공간인 플랫폼은 상업경제 생태계의 한 축을 이루고 있다.

1970년대 이전 소비생활을 시작했던 세대가 현재 60대 이상의 소비자이다. 그 세대 소비자들의 주 소비생활플랫폼은 전통시장이었다. 수요가 공급을 넘어서는 그야말로 물건이 없어서 못 팔던 시기였다. 1980년대 지금의 50대 소비자들은 전통시장과 더불어 슈퍼마켓, 상점가를 주 소비플랫폼으로 이용하였다. 상품은 가격과 품질의 단순경쟁시대였다.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대기업을 중심으로 고객만족(CS)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상거래의 주도권이 소비자에게로 넘어가게 되는 시기라 할 수 있었다. 이 당시 현재 40대인 소비자들의 주요 소비플랫폼은 대형마트, 편의점, 마트로 원스톱쇼핑의 편리함과 결제편의에 익숙하게 된 세대이다.

2000년대 들어서 초고속인터넷망의 확대와 고객만족, 고객관리, 상품의 디자인을 중요시 할만큼 상업경제의 무한경쟁시대가 시작되었다. 인터넷쇼핑몰, TV홈쇼핑이 소비자들의 소비생활의 플랫폼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으며 택배로 일컬어지는 물류체계가 정착되기 시작했던 시기였다.

2010년대 소비생활을 주도적으로 하기 시작했던 소비자들이 현재 20대이다. 5G 초고속 모바일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모바일시대, 1인 1휴대폰시대에 유무선 쇼핑물, 택배물류, 배달서비스의 비약적 발전으로 소비생활플랫폼의 탈현장화가 심화되고 있다. 또한 1인 소가구가 전체 가구의 30%를 넘는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소비플랫폼의 대변화 선상에 놓여 있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소비경제 생태계 변화

지난해 1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은 전세계의 경제, 문화, 정치의 대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많은 국가들의 섣다른 정책으로 해외여행 자체가 불가능해졌다. 여행사, 항공사를 비롯해 국가의 관광산업 자체가 붕괴되었다. 사회적 거리두기, 집합금지 명령하에서 공연, 전시, 스포츠산업의 일상적 경제활동도 무너졌다. 전체적인 비대면 경제문화활동 상황에서 전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겪는 어려움과 고통의 정도가 심각하다.

한국신용데이터에 따르면 2020년 12월 마지막 주 서울 소상공인 점포의 신용카드 매출은 2019년 대비 61%가 감소했다. 전국 소상공인 매출도 2019년 대비 56%에 그쳤다. 업종별로는 스포츠레저업종이 27%, 카페, 식당 등 요식업이 35%에 불과했다.

주로 대면거래가 일반적인 스포츠센터, 목욕탕, PC방, (코인)노래방, 음식점, 커피전문점 등 대부분의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은 코로나 확진자의 발생, 사회적 거리두기, 집합제한의 상황에서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매월 전통시장 1,300개소와 소상공인 2,400명을 대상으로 경기동향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9월 소상공인 체감경기지수는 54.9%이었다. 또한 소상공인 10명 중 9명은 계속 매출이 줄어든 것으로 전망하였다.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들을 위한 300만 원, 영업시간제한업종은 200만 원, 매출감소 소상공인들에게는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이나 최대 20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등은 장기간에 걸쳐 인건비, 임대료 등의 고정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대부분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사회안전망의 확장에 대한 과제만을 남길 수밖에 없는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자들의 소비생활도 빠르게 변화에 적응하여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정부방침에 따른 기존 대면식 소비플랫폼 이용의 제약은 자연스럽게 비대면(언택트)소비생활에 대한 빠른 적응으로 이어졌다.

5G, 택배물류시스템, 모바일폰의 비약적인 발전환경과 1, 2인 생활가구의 증가 환경 하에서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한 상품구매와 배달앱 등을 활용한 즉석 음식 배달서비스의 이용은 국내 소비생활패턴의 예견된 변화였으나 코로나19는 그 속도를 급격히 빠르게 앞당겼으며 온라인 쇼핑이나 배달서비스에 불편함을 느꼈던 중장년층에까지 소비생활의 변화를 강요하게 되었다.

마케팅 그룹 크리에오의 조사에 따르면 국내 소비자의 76%가 앞으로도 온라인 쇼핑을 늘릴 것이라고 응답했다. 특이할만한 점은 모든 세대가 동일한 응답을 했다는 것이다. 온라인 쇼핑과 배달음식에 익숙하지 않았던 베이비부머세대(1946~1964년생)들도 77%의 같은 응답을 하였다. 코로나19 팬데믹은 그동안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의 주요 고객들까지 온라인(모바일 포함)플랫폼으로의 소비 비중을 빠르게 증가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의
소상공인들의 대응

요즘 소상공인이거나 자영업자들에게 하나의 교훈이 생겼다. 코로나19가 쉽사리 끝나지 않을 것이라 판단되는 우려 속에서 ‘무엇이라도 해야 한다’ 는 자생의 교훈이 널리 퍼지고 있다는 것이다. 소비자 와 만나는 공간은 온라인(모바일 포함)과 오프라인 크게 두 개의 플랫폼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같은 커다란 사회변곡점 과정에는 소상공인도 업종에 따라 그 혜택을 보는 경우와 큰 타격을 받는 업종이 있을 수밖에 없다. 다만 그 비중이 피해업종이 훨씬 많다는 사실이 있을 뿐이다. 작년 한해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은 70.3%였으며 평균 37.4%의 매출감소율을 보였다.(소상공인연합회 코로나영향실태조사)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소상공인과 전통시장도 비대면 소비경제의 생태계변화 한축으로서 변화는 불가피한 것이다. 판매플랫폼을 네이버밴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를 활용했던 판매자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 상품을 판매하던 소상공인들, 배달서비스를 주로 하는 치킨, 피자, 분식업종 들은 코로나19에 오히려 매출이 증가하기도 하였다.

커피전문점도 도시락(런치박스) 배달을 겸하거나 배달앱 가입을 통하여 배달서비스를 시작하는 음식점 등 위기상황에 대응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으나 배달전문 프랜차이즈를 제외하고는 배달앱 대행료, 포장재 비용, 배달 수수료, 홍보이벤트비 등의 비용이 부담이 되어 녹록치 않은 상황으로 빨리 코로나19 상황이 지나가기를 바랄 뿐이다.

전통시장 자영업자들도 마찬가지이다. 작년 초부터 전통시장 상품을 판매하는 모바일앱 플랫폼을 시작으로 온라인 마케팅과 판매를 병행하고 있으며 작년 5월부터는 전국 전통시장들이 유튜브를 활용한 라이브커머스를 통해 특정 점포와 상품들의 판매와 시장홍보를 해오고 있다. 이러한 라이브커머스는 인플루언서들을 출연시키고 11번가, 위메프, 쿠팡 등 오픈마켓 등과의 협업을 통해 매출을 극대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들을 실행하고 있으나 이 역시 방송부대비용에 따른 경제성 논란과 특정 상품에 국한되는 한계로 인해 전통시장 자체적으로 지속적인 운영이 가능할 지는 미지수이다. 많은 전통 시장들이 기존의 전화주문서비스에서 자체 앱 또는 상업용, 공공용 모바일플랫폼을 활용한 주문과 배달서비스를 통해 이 시기에 적응하고 있으며 점포들의 오픈마켓 입점을 권장하고 지원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 스마트 대한민국’ 슬로건 하에 소상공인 점포의 디지털화 및 소상공인 디지털 역량 강화를 통한 디지털 격차해소, 디지털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새로운 소비플랫폼의 적응과 대응을 추진하고 있다.

상점가의 점포들을 대상으로 스마트오더, 무인스마트스토어 10만 개와 스마트 공방 1만 개를 만들고 전통시장의 온라인플랫폼 진출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을 확대하고 2025년까지 5만 명에게 디지털활용 교육을 제공하는 등 새로운 디지털환경하에서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대응역량강화를 위해 관련정책을 시행중에 있다.

새로운 소비경제
생태계의 이해

소비경제는 다양한 환경변수에 따른 소비자들의 구매행태변화(소비트렌드)와 판매자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대응의 순한 생태계이다. 간혹 특정 상품이 소비자들을 선도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은 그러한 생태계 속에 한 축을 유지하며 활동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와 같은 천재지변과 다를 바 없는 급격한 변수의 발생으로 인한 경우, 정상적인 경제 생태계가 작동하지 않기에 일정기간 동안 정부의 적극적이고 과감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그것이 정부의 역할이고 사회안전망의 확대가 필요한 이유이다.

국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도 이미 언택트 소비활동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으며 이미 새로운 소비 플랫폼을 경험하였고 대체적으로 만족하고 있는 소비자들의 언택트 소비활동은 점증될 것이다. 하지만 언택트 소비가 증가한다 하더라도 오프라인에서의 소비와 소통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단순한 상품 구입만을 목적으로 하는 언택트 소비활동도 한계가 있는 것이다. 소비자들은 상대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오프라인 매장에서의 경험과 색다른 체험을 원할 것이다. 즉 온라인과 오프라인, 비대면과 대면소비활동의 목적하는 바가 달라질 것이다.

코로나19 이후에도 언택트 소비는 강화될 것이라 예측이 가능한 속에 대면성이 높고 대체성이 높은 대부분의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의 소상공인들은 매장공간, 상품의 품질향상, 체험적 요소에 대한 강화를 통해 새로운 소비생태계로 이동하는 한 축을 맞이해야 한다.

특히 전통시장도 중소벤처기업부의 디지털 전통시장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지속되는 비대면 판매활동을 확대하면서 시장 현장 및 점포에 방문하는 고객들에게 예전보다 더 나은 대고객 서비스와 온오프라인을 상호 연계할 수 있는 마케팅전략을 실행하여야 한다. 즉 라이브커머스를 할 때에도 접속자들이 시장현장에 방문할 수 있는 쿠폰이나 방송시청 후 방문고객에게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등의 연계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배송 서비스를 할 때에도 주요 고객들에게 요리체험이나 행사시 우대기회를 제공하여 시장현장을 추가 방문하도록 유인하는 등의 적극적인 연계마케팅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소상공인들은 관성의 힘으로 심화될 비대면 소비트렌드에 순응하면서도 오프라인에서의 고객들에게 반사적인 만족을 줄 수 있는 공간, 상품, 체험적 요인들의 차별화를 통해 공간과 상품의 포트폴리오 전략을 마련해야한다는 것이다. 또한 온오프라인 연계마케팅의 고민과 실행으로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키는 지혜가 필요하다. 정부 역시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종식되어도 소비생태계의 축이 이동한 상황에 적합한 정책기조를 유지해야하며 비대면 소비와 대면 소비 경제의 구조와 흐름을 이해하고 선도적인 정책수립이 요구되는 시기이다.



특집

04

복지 분야 코로나19시대의
사회변화와 지역복지의 방향

이재완 | 공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1. 뉴노멀시대의 불청객 코로나바이러스

코로나19가 우리 삶의 일상이 되고 있다. 현대의학 및 기술의 진보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이 넘도록 코로나바이러스는 확산되고 있으며,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가 출현하고 있다. 2021년 2월 현재, 코로나바이러스 확진환자는 전 세계적으로 1억 명이 넘고 있으며 사망자는 230만 명에 이르고 있다. 우리나라도 확진환자가 8천 명, 사망자가 1,500명이 넘고 있다. 지구촌에서 벌어지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적인 인적, 물적 피해는 전쟁보다 더한 상황이다(한국전쟁으로 인한 사망자 137만 명, 베트남 전쟁사망자 약 200만 명).

인간의 겪는 극도의 공포는 무지에서 비롯된다. 코로나바이러스 치료약이 나오지 않는 한 우리는 코로나19시대를 슬기롭게 살아 나가야 한다. 역사적으로 인류 중 호모 사피엔스가 살아남았던 것처럼 환경에 순응하고 진화해야 한다. 호모 사피엔스가 생존했던 방식은 바로 사회적 동물 즉, 공동체를 형성했기 때문이다. 즉 인류의 선조가 했던 것처럼 사회적 동물의 본성을 회복하여 공동체 구성원과 함께 연대하고 협력하는 것이다.

한편 사전적 의미로 뉴노멀(New Normal)이란 시대 변화에 따라 새롭게 부상하는 표준이며, 시대란 역사적으로 어떤 표준에 의하여 구분한 일정한 기간이다. 결국 코로나 뉴노멀시대는 새로운 표준에 따라 변화된 세상에 적응하고 진화해 나가야 하는 시대이다. 창조 또는 혁신의 반대말이 무엇인가? 바로 두려움이다. 미지의 세계, 가보지 않은 길 또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바로 창조적 행위를 가로막는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길을 가야 한다. 그런데 21세기를 살고 있는 호모 사피엔스에게는 4차 산업혁명이 가져다 준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과학기술의 성과가 있고 현재 진행 중이다. 즉 인류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삶의 방식이 혁명적으로 변화하는 시대에 살고 있고, 앞으로 지혜롭게 준비해야 한다. 바로 뉴노멀시대인 것이다. 만약 인간이 현재의 삶의 방식을 기술진보에 따라 변화(진화)시켰다면, 또는 우리의 욕망을 절제하였다면, 코로나바이러스라는 유령은 무덤에서 나오지 못했을 것이다. 그래도 희망이 있는 것은 우리에게 4차 산업혁명이 가져다 준 선물이 있기에 호모 사피엔스의 인간성과

창조적 능력을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위기를 기회로 보면 코로나19가 오히려 4차 산업혁명시대¹⁾의 미래로 가는 로제타스톤에 비밀의 문을 활짝 열어줄 촉매제가 될 것이다.

2. 코로나19와 4차 산업혁명시대의 사회변화

사회가 혁명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현재의 거대한 변화의 동인은 4차 산업혁명으로 표현되는 디지털사회이며 코로나19팬데믹이다. 이것은 시대와 사람 그리고 공간구조와 기능의 새로운 표준(뉴노멀)을 만들고 있다. 4차 산업혁명시대의 뉴노멀은 코로나바이러스로 성큼 다가왔다. 개인, 조직, 지역사회를 둘러싼 거대한 변화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과학기술의 진보이다. 이제는 인공지능(AI), 로봇, 사물인터넷(IoT), 드론, 플랫폼 경제(Platform Economy), 빅데이터(Big Data), 3D 프린팅, 무인운송수단(자율주행차량, 무인항공기) 등이며 이들 기술은 인터넷으로 연결되고 사이버 물리 시스템(Cyber Physical systems)에 의한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 둘째, 일하는 방식의 변화이다. 삶터와 일터의 구별이 없어지고 대면적 접촉없는 재택근무(원격근무), 그리고 로봇과 인공지능 등이 인간의 노동을 대신할 것이다. 셋째, 4차 산업혁명 기술문명은 디지털 인간으로 진화하도록 할 것이다. 과거 호모 사피엔스의 생존방식처럼 인간은 지혜롭게 현재의 위기를 다양한 공동체 구성원간의 교류 및 협력을 통해 극복할 것이다. 넷째, 현재의 공간의 구조와 기능을 보다 개방적이고 분산화 시키면서 공유지를 확장해 나갈 것이다.

3. 지역사회의 사회적 ·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

코로나19로 지역사회는 신음하고 있다. 지역의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되고 있다. 지역상권이 무너지고 있다. 사회경제적 양극화의 최전선은 바로 지역사회이다. 지역의 불평등 문제는 코로나바이러스로 더욱 심화되고 있다.

바이러스가 모두에게 평등하다는 언설은 기만이며 결코 발생원인과 과정, 그리고 결과와 회복에서 공정하지 않다. 코로나바이러스로부터 가장 취약한 집단은 대면적 접촉을 하는 사람들이다. 지역사회에서 그들은 택배기사, 돌봄노동자, 청소부, 마트 판매원, 식당 서빙노동자, 주거복지소외자, 영세자영업자, 일용직노동자 등 소위 취약계층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의하면 코로나19로 소득격차가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분배가 악화된 것은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은 늘지 않았는데 고소득층 가구소득은 크게 늘어 빈부격차가 심화된 것이다.

1)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핵심요인은 인공지능(AI), 로봇, 사물인터넷(IoT), 드론, 플랫폼 경제(Platform Economy), 빅데이터(Big Data), 3D 프린팅, 무인운송수단(자율주행차량, 무인항공기) 등이다. 이들 기술은 인터넷으로 연결되고 사이버 물리 시스템(Cyber Physical systems)을 통해 산업현장에서 급속한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도래는 디지털 문명의 새로운 표준이 될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의 도래에 따른 변화는 인공지능, 로봇 등이 저숙련 일자리를 대체하면서 생산가능인구 감소 문제를 해소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로봇노동의 잉여가치를 노동자가 나누어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영국 통계청(ONS)의 인종별 사망 확률을 분석한 자료(2020년 5월)에 의하면 흑인 남성의 코로나19 사망 확률은 백인 남성의 4.2배, 흑인 여성은 백인 여성의 4.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자들은 주거 환경, 도시와 농촌 격차, 소득, 교육 수준과 같은 요소들이 이런 차이를 만들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좁은 공간에 사람이 많이 모여 살면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공간의 불평등을 발생시키고 코로나바이러스는 공간의 폐쇄성에 기생하며 틈만 나면 담장 밖을 넘보고 있다. 결국 문제의 원인은 코로나바이러스가 아니라 바로 불평등한 지역사회 구조에 있는 것이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지역사회의 어두운 삶의 현장에 다가가는 것은 많은 제약이 있다. 사회복지연구자, 사회복지실천가 또는 자원봉사자조차도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언덕에 기대어 숨을 죽이고 있다. 코로나19극복의 지속가능한 방안의 핵심은 바로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해결하는 것이다. 그리고 지역사회중심의 보건, 의료, 복지의 상호연계체계를 통해 통합적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

4. 코로나19시대 사회복지현장의 대응과제

우리나라의 코로나바이러스 방역에 대한 평가는 전 세계로부터 부러움과 찬사를 받고 있다. 국내 첫 확진자 발생이후 방역당국은 코로나19감염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와 효과적인 선제대응을 통해 지역감염확산을 막았다. 물론 이 과정에서 정보공개(동선추적)에 대한 논란과 마스크 대란 등의 문제가 있었으나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구성원들은 불편함과 제한된 자유를 감수하였다. 한국인의 유전자속에 내재된 관계중심적이고 집합주의적 속성이 코로나팬데믹 극복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다. 즉, 역사적으로 사회적 위기시 마다 협동과 연대는 매우 탁월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역과정에서 나타난 사회복지현장의 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유행대비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을 시설유형 또는 지역별(감염병 발생여부)로 세분화하여 현장의 혼란을 줄여야 한다. 전국적으로 획일적인 지침적용을 유연하게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사회복지시설 프로그램 중단여부, 사회복지인력 이동, 외부출입 및 면회관련 사항, 시설운영의 자율적 판단에 따른 책임성 문제 등에 대해 명확히 해야 한다.

둘째, 사회복지시설에 코로나19의 일상화와 각종 질병발생 등을 담당하는 방역점검의 책임자를 배치하고 돌봄노동자 및 대인서비스 업무종사자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영국의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코로나19로 인한 요양보호사(Social care workers)들의 사망률이 일반사람들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간호사, 의사, 간호조무사, 앰블런스 운전자, 병원직원 등은 일반사람들과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다.

셋째, 시군구단위의 감염병대응 민관협력컨트를 타워의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이 필요하다(협업체계구축). 이를 통해 지역사회의 방역과 활동 수준을 지도·조정해야 한다.

넷째, 사회복지시설 입소자(거주자)의 일상생활 선택권을 존중해야 한다. 예를 들어 비장애인들은 친구를 만나 여가 문화시설을 이용하는 등 개인의 책임하에 사회활동을 한다. 그러나 시설 생활자들은 철저히 이러한 욕구가 억압되고 있다.

다섯째, 코로나19에 따른 각종 필요장비구입 및 대응활동(정보통신기기 구입 및 활용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예산 지원을 해야 한다.

여섯째, 코로나19로 인한 고립으로 불안과 우울(코로나 블루)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심리적 방역이 필요하다.



5. 코로나19시대, 지역사회복지의 방향

코로나19와 4차 산업혁명시대에 따른 사회변화는 과거와 다른 양상으로 지역사회이슈를 발생시킬 것이다. 첫째, 개인, 집단, 사회의 불평등이 증가하고, 디지털 디바이드가 심화될 것이다. 이로 인한 세대간, 계층간 갈등이 나타날 것이며, 변화하는 시대에 자발적 고립이나 사회적응 실패(소외, 차별 등)로 사람들의 심리적, 정신적 질병이 현저하게 증가할 것이다.

둘째, 인간과 공동체 구성원들의 소득보장은 디지털문명의 성과로 이전 소득에 의해 유지될 것이지만 소위 돌봄서비스로 대표되는 휴먼서비스는 인공지능, 로봇 등이 일부 대체하겠지만 본질적으로 대체불가한 영역이 될 것이다.

셋째, 사물인터넷과 결합된 주거 및 생활공간이 구축될 것이며 물리적 공간과 사이버공간의 융합이 나타날 것이다. 특히 공간의 구조와 기능의 변화로 생활환경공간의 새로운 표준이 등장할 것이다.

따라서 뉴노멀 시대의 '지역사회의 복지'의 방향은 기본적으로 공동체성 회복과 새로운 공동체를 창조해야 한다. 첫째, 지역사회복지의 전체를 관통하는 새로운 흐름은 과학기술의 진보에 적응 또는 활용하는 방식으로 언컨택트사회의 컨택트화를 지향해야 한다. 둘째, 수평적, 개방적 공동체 또는 지역사회 문화를 형성해야 한다. 셋째, 주민자치를 위한 효과적인 다양한 주민참여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즉, 실질적인 직접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다양한 방식이 논의될 것이며 전자민주주의(디지털 민주주의)가 나타날 것이다. 넷째, 디지털 디바이드 극복을 위한 주민(공동체 구성원) IT역량강화 및 사회적응을 위한 평생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다섯째, 돌봄노동이 사회화 될 것이며, 이에 대한 인력수요를 준비해야 한다. 여섯째,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복지시설 등 각종 물리적 공간의 재구조화를 모색해야 한다. 일곱째, 지리적 지역사회, 기능적 지역사회, 그리고 사이버 지역사회 등에서 공동체 복지를 위한 모바일기반 스마트 지역사회만들기를 실천해야 한다.

※ 이 글은 이재완, 2020. 코로나 뉴노멀(New Normal)시대 지역사회복지의 변화와 방향, 한국지역사회복지학 제74집의 내용을 일부 수정, 요약한 것이다.

현안연구

- 01 충남 광역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 재정립 연구
- 02 충남의 깨끗한 해양환경 만들기 추진 성과와 평가
- 03 공주문화도시 조성계획에 따른 문화영향평가의 사례와 시사점



현안연구

01

충남 광역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 재정립 연구

강마야 | 충남연구원 경제·산업연구실 연구위원

1. 서론

과거 천안중부물류센터, 금산국제인삼종합유통센터 등과 같이 충남 농정의 사업실패 경험으로부터 교훈을 얻은 바 당초 민선 7기 동안 추진하고자 했던 광역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계획 및 광역 먹거리통합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광역 먹거리통합지원센터 타당성 분석(2019년 연구용역) 재검토와 함께 센터 건립 신중론과 찬성론 입장 검토, 광역 먹거리통합정책 방향 모색과 컨트롤타워로서 기능과 역할 재정립 등 근본적인 추진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2. 추진경과

2018년~2019년에 수립한 '충청남도 광역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위치** : 충청남도 부여군 남면 내곡리 174-4(구 남성중학교 폐교 부지)
- **사업기간** : 2019년~2022년(당초 4년 간) → 2021년~2023년(변경 3년 간)
- **사업비** : 185억 원(국비 50%, 도비 50%)(부지매입비 10억 원, 건축·시설비 175억 원)
- **사업규모** : 부지 21,232㎡, 건물 5,963㎡ 등 약 1,800평 규모
- **주요시설** :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전처리시설, 친환경농산물매장, 직거래 물류센터, 지역가공센터, 광역푸드인증센터, 먹거리 교육센터(시민교육체험관), 식농체험교육장, 로컬푸드 식당, 카페, 사무실, 회의실 등
- **운영조직** : 재단법인 「충남푸드통합지원센터」 (5팀 20명)
- **주요기능** :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체계 및 통합물류 구축 등

자료: 충청남도 농식품유통과(2020), 광역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발전방안 T/F 회의자료(2020.09.03.), p.1.

2018년부터 현재까지 진행되어 온 추진경과는 다음과 같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①광역 푸드플랜 연구용역 완료(2018.7.~2019.3.) → ②광역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기본계획 수립(2018.9.) → ③도 지방재정투자심사 조건부 승인(2018.9.) → ④부여군을 공모·대상지로 선정(2019.6.) → ⑤충청남도 먹거리보장 기본계획 수립(2019.9.) → ⑥충청남도 먹거리보장 기본조례 제정(2019.12.) → ⑦먹거리통합정책(푸드플랜) 정책 재진단 및 효율적 추진방안 마련(2020.3.) → ⑧부여군에 대체사업 제안(2020.10.) → ⑨부여군과 도지사 면담(2020.11.) → ⑩충청남도와 부여군 실무자간 협의 중(2020.11.~계속)

자료: 충청남도 농식품유통과(2020), 국가먹거리 종합전략 수립 및 농어업·농어촌 분야 뉴딜 : 2020 농정 대전환 전국순회 원탁회의(참고6) 충청남도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추진현황, p.10.

3. 충남 광역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 타당성 분석 재검토 및 찬반론¹⁾

충남 광역 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하되 먹거리라는 특수성과 공공재 성격을 감안하여 경제성보다는 공익성 측면을 감안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를 기본전제로 하여 타당성 분석 재검토 결과, 센터 매출액 자체가 경제성 분석에서 편익이 되지는 않기에 대신 매출액 증가분이 반영되어야 하고, 광역 센터의 매출 증대가 시군 센터의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면 이에 대한 상쇄가 필요하며, 센터 내 각종 시설의 성장률 수치 과다추정 오류가 있어서 비용편익 분석이 다시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경제적 타당성 있음’ 판단은 재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광역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신증론은 공공급식 수요예측에 대한 과잉 추정, 재단설립 및 운영과 물류수행에 있어서 인건비와 시설비의 지속적 투입은 무리이고 적자운영 불가피, 기존 유사사업 운영 실패사례로부터 교훈, 시군 및 생산자 입장에서 광역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이용 시 물류비 추가 소요, 실제 농가소득 향상에 미치는 영향 요인은 적을 것으로 판단, 시군에 광역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의무적 이용 강제할 수단 부재, 국가 및 지역 먹거리통합정책(푸드플랜) 정책추진 분위기 미성숙, 시기상조로 판단, 먹거리 정의(정책목표)와 광역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정책수단)은 정책목표와 정책수단 간 불일치, 사업비 중 국비매칭 사업비 전무하여 도 재정에 부담, 유사한 사례가 존재하지 않는 이유 등 책임경영 마인드 부족, 경영미숙에 따른 재정낭비 등 실무추진 역량 측면에서 행정수행은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광역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찬성론은 높은 타 지역산 친환경농산물 유통 대신 충남산 친환경농산물 유통 확대, 15개 시군의 낮은 공급을 확대, 품목 다양성 문제 및 수급가능한 품목 불균형 문제 해결, 저가입찰제 폐해 극복, 과거 실패사례와 먹거리센터는 공공성 측면에서 차이점, 광역 단위 먹거리통합정책 기능과 역할 강화 등을 근거로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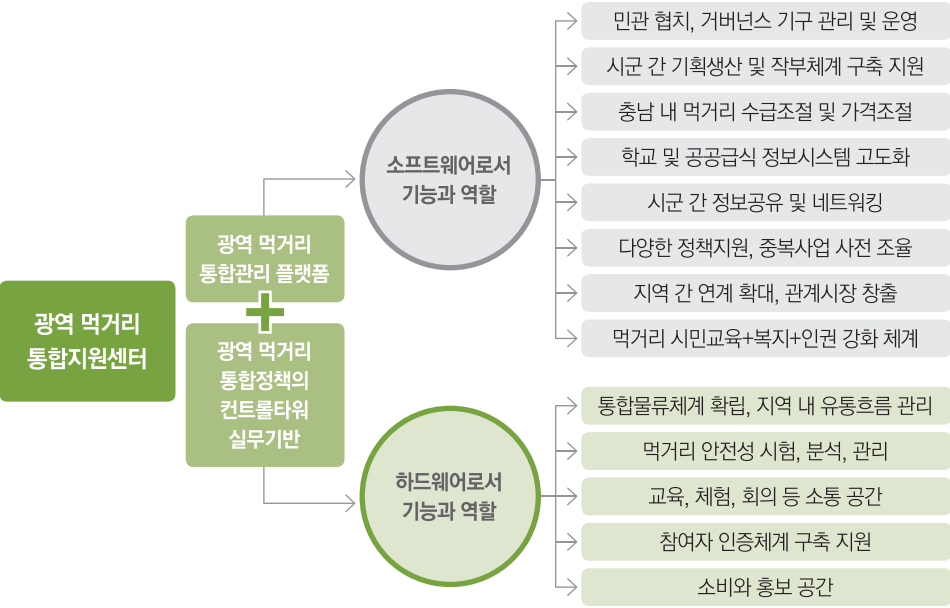
1) 자료: 충남연구원 충남공공투자관리센터(2020), 충청남도 푸드플랜 수립 연구용역 광역푸드지원센터 재무적·경제적 타당성 검토의견서 (충남공공투자관리센터-0800, 2020.11.13.).

4. 충남 광역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방향

우선 충남 광역 먹거리통합정책의 기본원칙과 방향은 15개 시군 먹거리통합정책 컨트롤타워로서 민간 협치 행위를 기본으로 하여 가장 우선순위로 설정합니다.

둘째, 충남 광역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로서의 기능과 역할은 다음 <그림 1>과 같습니다.

그림 1 | 충남 광역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로서의 기능과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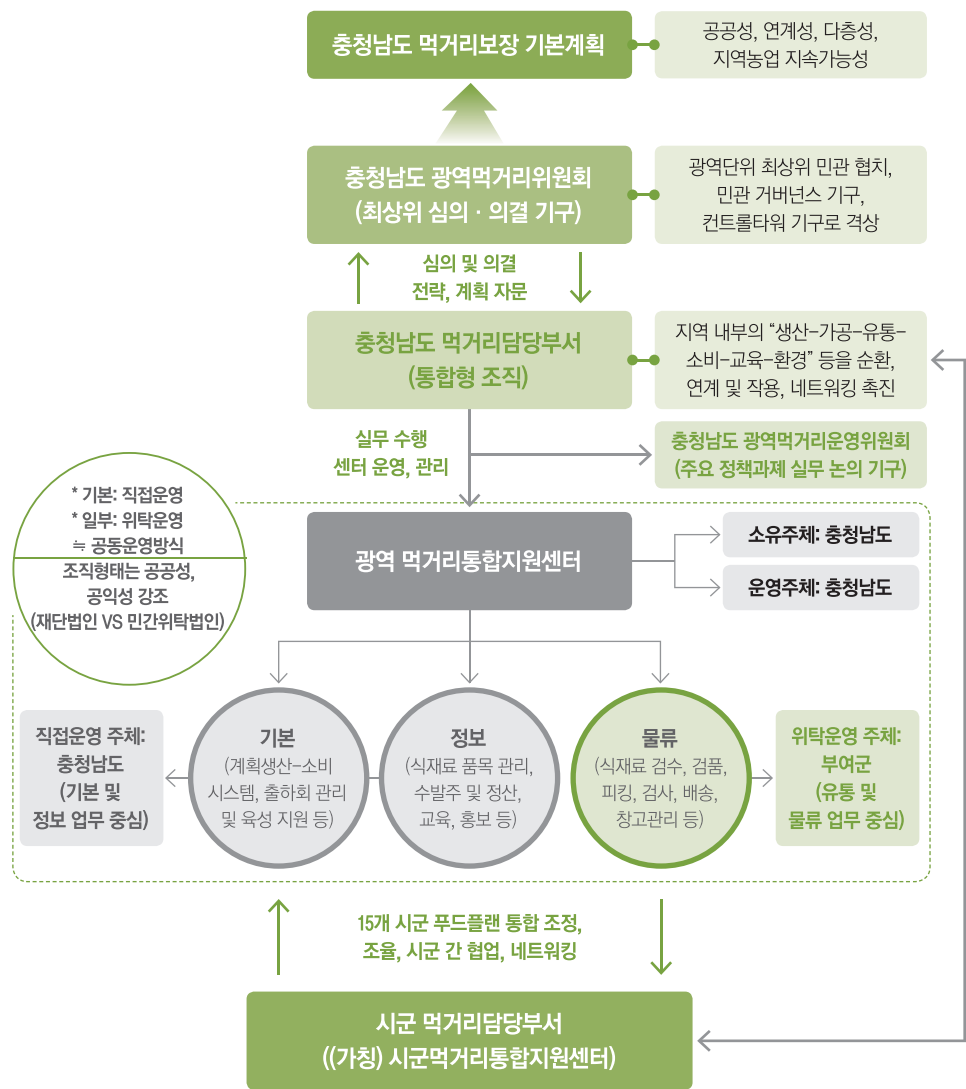
주: 저자 작성함.

셋째, 충남 광역의 물류기능 역할은 경영효율성, 재정 측면, 운영 측면, 업무 전문성, 업무 지속성, 책임 소재, 고용 유연성 측면에서 장단점을 비교해보면, 전반적으로 물류기능은 실무적이고 숙련도를 요구하는 분야이므로 효율성 측면에서 직영보다 위탁(외부용역)이 적합할 것으로 보입니다. 광역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시군 학교급식지원센터와 경쟁구도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상호 보완하여 물류 효율성 개선이라는 관점으로 봐야 합니다. 광역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15개 시군 전역을 대상으로 물류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하므로, 자칫 기초지자체 역량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기존 시군별 기반시설을 적극 활용하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 역할로서만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만약 충청남도가 사업비 확보를 하지 못할 경우, 충남 내 거점단위(북부권, 남부권, 중부권 VS 동부권, 서부권, 중부권)로 구분하여 시군 인프라를 활용한 물류기능 대체방안도 제안해 봅니다.

넷째, 충남 광역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방식은 위탁운영 방식(하드웨어 소유주체는 충청남도, 운영주체는 광역 민간단체 연합체이거나 특정시군 등 여러 형태), 직접운영 방식(공사, 공단, 재단법인 등 형태), 공동운영 방식(충청남도와 특정 시군 공동 부담) 등을 놓고선 장단점을 파악하여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100% 민간위탁은 공공성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고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되므로 직접운영 방식이 본 사업 취지에 좀 더 부합하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광역 먹거리통합정책의 추진체계는 다음 <그림 2>와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전체 추진체계는 충청남도 먹거리보장 기본계획을 필두로 충청남도 광역먹거리위원회를 최상위 심의 및 의결기구로 설정, 충청남도 먹거리담당부서(통합형 조직)가 중간 허리 역할을 하는데 광역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과 관리 등 실무 수행, 광역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소유주체와 운영주체는 충청남도가 되고 직접운영 방식을 취하 되 일부 물류기능에 한해서 위탁운영 방식 채택, 조직형태는 먹거리 공공성과 공익성을 고려해서 재단법인 혹은 공공형 민간위탁법인 방식을 채택합니다.

Ⅰ 그림 2 Ⅰ 충남 광역 먹거리통합정책의 추진체계도



주: 저자 작성함.

5. 결론

충청남도 광역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및 먹거리통합정책의 기능과 역할 재정립은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봅니다. 충남 광역 먹거리통합정책은 시군 먹거리통합정책이 일정 수준 안정화 궤도에 올랐을 때 광역 먹거리통합정책도 제대로 작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재원부담 주체=물적기반 소유권=운영권(주도권)=운영방식-운영비 보전 일치화'가 필요합니다. 재원부담 비율, 토지와 건물 등 물적 기반 소유권, 운영권은 동일해야 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 되어야 하고, 운영권 중 일부 사업기능을 위탁하더라도 전 과정에 걸쳐서 충청남도가 주도권을 가지고 실행해야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단 '민관 협치 운영-조직 및 예산 등 각종 기반 확보-조직화된 생산자 및 시민 양성'도 일치시켜야 합니다. 결국 충청남도의 광역먹거리통합지원정책 추진을 위한 결단력, 도정 방향과 목표설정이 관건이라는 얘기입니다.

광역 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건물과 건축, 시설과 같은 하드웨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광역 먹거리통합정책을 추진할 운영주체(소프트웨어)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아쉽게도 현재 충청남도는 먹거리 공공성을 고려하는 운영주체로서의 정책방향, 민관협치, 추진전략 등을 고민하기보다는 대규모 시설 건립에 대한 경영부담, 운영실패에 대한 두려움 등에 더 큰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고민의 우선순위를 바꿔보기를 제안합니다. 행정 혼자 그 무게를 감당하기보다는 세부 사안별로 민간과 함께 협치구조를 만들고 치열하게 논의하면서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Ⅰ 참고문헌 Ⅰ

- 충청남도 농식품유통과(2020), 광역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발전방안 T/F 회의자료(2020.09.03.), p.1.
- 충청남도 농식품유통과(2020), 국가먹거리 종합전략 수립 및 농어업 · 농어촌 분야 뉴딜: 2020 농정 대전환 전국순회 원탁회의(참고6) 충남 광역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추진현황, p.10. 1
- 충남연구원 충남공공투자관리센터(2020), 충청남도 푸드플랜 수립 연구용역 광역푸드지원센터 재무적 · 경제적 타당성 검토의견서(충남 공공투자관리센터-0800, 2020.11.13.).

※ 이번 원고는 “충남 광역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 재정립 등에 관한 연구(강마야, 2020)”를 토대로 요약, 재구성한 것입니다.



현안연구

02

충남의 깨끗한 해양환경
만들기 추진 성과와 평가

윤종주 | 충남연구원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전임연구위원

1. 해양쓰레기로 인한 문제점은?

국내 해양쓰레기 발생량은 연간 약 14.5만 톤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5톤트럭 약 29,000대 분량에 달한다. 육상기인 쓰레기가 전체의 2/3를 차지하며, 충남도의 연간 해양쓰레기 발생량은 약 18,500톤으로 전국대비 약 13%를 차지하고 있다. 세계적으로도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 태평양 한가운데에 위치한 5개의 거대한 쓰레기섬은 매우 잘 알려져 있다. 인도네시아 발리, 필리핀 보라카이 등 유명 관광지도 최근 해안가쓰레기로 인해 일정기간 폐쇄된 사례가 있다.

최근에는 미세플라스틱이 큰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스티로폼 등의 플라스틱 제품이 잘게 부서지면서 생성되는데, 해양으로 유입되어 다양한 환경오염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이러한 미세플라스틱의 인체유해성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에 있는데, 우리가 주로 섭취하는 수산물에도 일부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나도 모르게 1인당 매주 신용카드 1장 분량의 플라스틱이 인체에 섭취되고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3위 수준의 1인당 플라스틱 소비국이다. 버려지는 플라스틱 쓰레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더욱더 중요한 이유이다.

쓰레기의 수거 및 처리 의무는 원인자 부담이 원칙이지만, 해양쓰레기의 경우 원인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각 지자체에서의 처리 부담이 지속적으로 가중되고 있다.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업무는 지자체의 위임사무 사항으로서 각 지자체의 관리 여건과 의지에 따라 관리성과가 크게 차이가 나고 있는 실정이다. 해양쓰레기의 총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발생량을 줄이는 것이 가장 빠른 대책이라 할 수 있으나, 바다로 유입되는 쓰레기의 발생량을 단기간에 감소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최근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플라스틱 재질의 일회용품 사용이 대폭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해양쓰레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발생량을 감소시키고, 적극적인 수거사업을 통해 수거량을 지속적으로 늘려 현존하는 쓰레기의 총량을 줄여나가는 것이다.

2. 충청남도 해양쓰레기 종합대책 추진 성과분석

충청남도는 연간 해양쓰레기 발생량에 비해 더 많은 수준의 해양쓰레기를 수거·처리하고 있다. 체계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중장기적으로 발생량을 줄이고, 수거량을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종합대책을 추진 중에 있다. ‘충청남도 깨끗한 해양환경 만들기’와 ‘도 해양쓰레기 제로화 사업’을 중심으로 시행 중인데, 충청남도는 해양쓰레기 관리 분야에서 도 단위 지자체에서 가장 선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 중으로 평가받고 있다. 본 절에서는 충남도의 해양쓰레기 관리 계획과 관리역량 분석을 통하여 관련 사업 추진 성과를 타 시도사례와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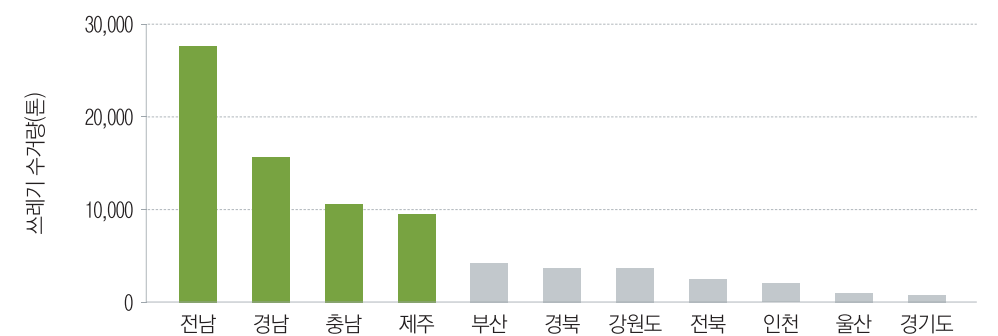
① 광역지자체 단위의 해양쓰레기 관리 기본계획 및 세부 시행계획 수립

-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해양쓰레기 수거 사업 추진
- 5년 단위 기본계획 및 년차별 시행계획 수립을 통한 지자체 주도의 체계적인 해양쓰레기 관리
 - ‘15년도 해양쓰레기 관리 세부 시행계획(『깨끗한 해양환경 만들기 종합계획, 2015』을 수립
 - ‘20년도 해양쓰레기 관리 세부 시행계획(『깨끗한 해양환경 만들기』종합대책 발전계획, 2020) 수립
- 충청남도 해양쓰레기 줄이기 원년 선언(‘18.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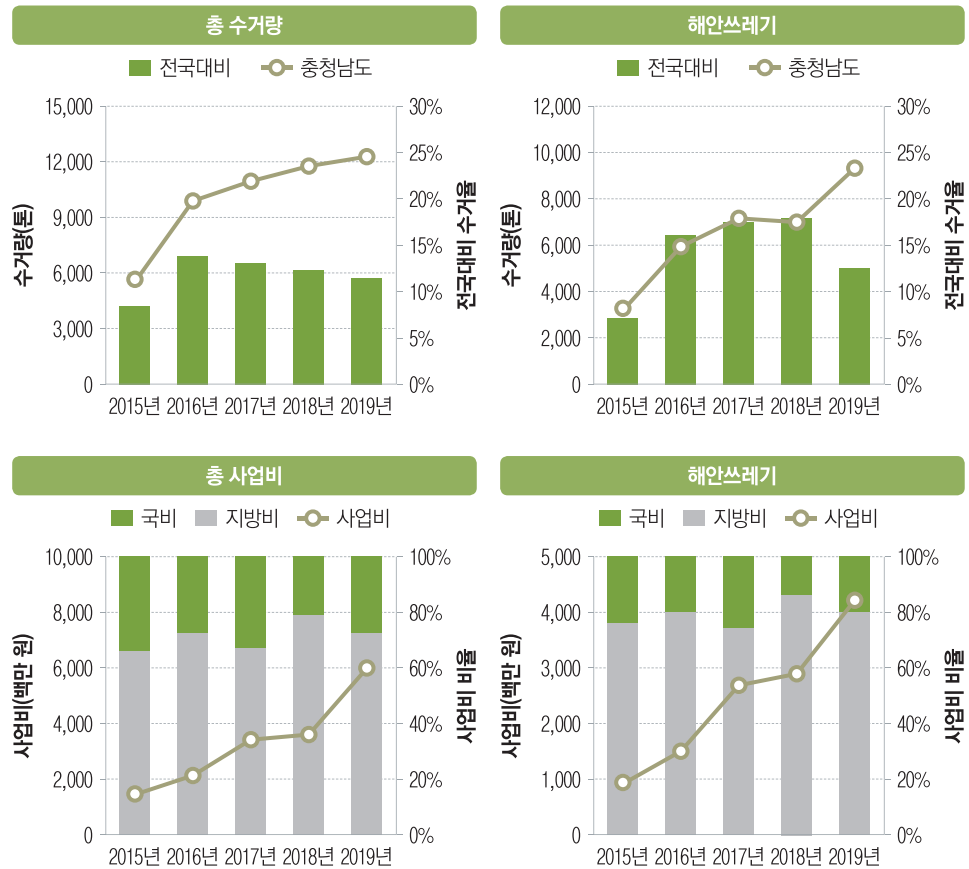
② (전국 최초) 충청남도 해양쓰레기 제로화 사업 시행 - 발생량 저감 및 수거량 확대

- (목표) 2015년부터 매년 발생량 5% 줄이고, 수거량 5% 늘리기
- 주요 추진사업
 - (해양쓰레기 제로화 사업) 해양쓰레기 수거사업 등
 - (수거인력 분업화) 해양환경도우미 배치 운영, 바다환경지킴이 지정 활용 등
 - (민간협력 수거) 민간협력 침적쓰레기 수거, 주민참여 우수사례 발굴, 지역수협 업무협약 등
- 주요 성과
 - 충청남도 해양쓰레기 제로화 달성을 위하여 매년 발생량은 5% 줄이고 수거량은 5% 늘리기를 목표로 관련 정책을 추진하여, 매년 성과목표 달성(2015년 이래)
 - ※ 수거량 연평균 증가율(‘15.~’19.): 29.9%
 - 2015년 이래, 전국 광역지자체 해양쓰레기 수거량 3~4위권을 지속적으로 유지(전남 1위, 경남 2위, 충남 3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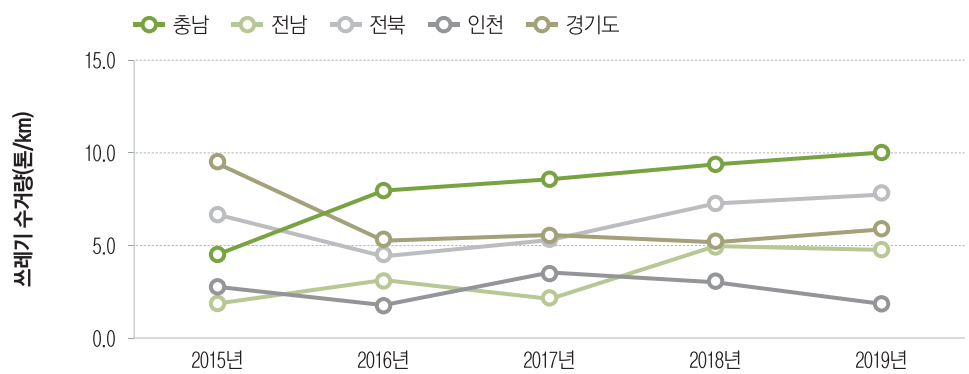
I 그림 1 I 지자체별 쓰레기 수거량 순위(‘16~’19년 평균)



Ⅰ 그림 2 Ⅰ 충청남도 해양쓰레기 수거량 및 총 사업비 증가세



Ⅱ 그림 3 Ⅱ 해안선 길이당 해양쓰레기 수거량 변화(충남이 선두)



- 해안선 1km당 해양쓰레기 수거량에서 충청남도가 광역지자체에서 1위의 수거량을 기록함
- 충청남도 해양쓰레기 수거에 직접 투입 사업비는 지속적 증가세('15년 1,503백만 원→'19년 6,270백만 원)
- 광역지자체별 해양쓰레기 관련 예산 비교 시, 2019년 기준 전남 102억, 인천 75억, 경남 50억, 충남 46억 수준으로 나타남(충남은 전국 대비 4위권 수준)



- 충남도는 정부사업 이외에 충남형 특화사업을 자체 예산 편성하여 추진해옴:
'우리마을 해양쓰레기는 내가' 청소마을 운영, '1사 1연안 가꾸기 운동', '지역해양환경교육센터 지정·운영', '해양환경도우미 활용' 등

③ (전국 최초) 국내 유일의 지역해양환경교육센터 지정·운영

- '지역해양환경교육센터' 4개소 지정·운영, 도민 해양환경인식 증진교육 추진
- 5년간 총 11,478명 해양환경 예방교육 실시
 - '15) 342명 → '16) 1,098명 → '17) 1,033명 → '18) 4,266명 → '19) 4,739명

④ (전국 최초) 도 단위 최초 해양쓰레기 발생량/분포량/수거량 직접 조사

- 2018년 '해양오염물질 발생원 모니터링 및 관리방안 수립' 용역 추진
 - 지자체 해양쓰레기 모니터링을 통한 지역해양쓰레기 발생량 및 현존량 파악(지자체 단위, 전국 최초)
-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충남 도내 해양쓰레기 세부 관리방안 수립

⑤ 기타 추진현황

- '우리 마을 해양쓰레기는 내가' 자율 청소마을 전국 최초 운영('15년부터 72개소 운영)
- 육상기인 해양쓰레기 유입 사전 차단시설 2개소 시범설치(서천군, 부여군 각 1개소)
- 해양환경도우미, 바다환경지킴이 등 수거인력 연간 155명 고용·운영
- 해양쓰레기 운반선(48억) 건조, 광역 해양자원 순환센터(전(前)처리시설) 추진
- 전국 연안 지자체 해양쓰레기 관리역량 평가 4년 연속 수상('16~'19)
-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주민참여분야 우수사례 표창 수상('18년)
- 해양쓰레기 관리예산 대폭 확대('15년 21개 사업, 94억 → '20년 32개 사업, 225억) 등

표 1 충청남도, 전국 해양쓰레기 수거량 현황 비교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충청남도	합계	수거량(톤)	5,657	9,737	11,045	11,792	12,415
		전국대비	8.2%	13.7%	13.4%	12.3%	11.4%
	부유쓰레기	수거량(톤)	36	141	43	51	1,019
		전국대비	0.8%	3.2%	1.0%	1.2%	23.5%
	침적쓰레기	수거량(톤)	2,254	2,131	2,190	2,862	1,990
		전국대비	13.9%	8.8%	7.4%	6.9%	7.7%
	해안쓰레기	수거량(톤)	3,356	5,946	7,126	7,135	9,406
		전국대비	7.2%	15.8%	17.5%	18.4%	12.5%
	기타	수거량(톤)	10	1,519	1,686	1,744	-
전국	합계(톤)		69,129	70,841	82,175	95,632	108,644
	부유쓰레기		4,330	4,697	4,461	5,666	7,713
	침적쓰레기		16,252	24,146	29,662	41,502	25,800
	해안쓰레기		46,641	37,538	40,738	38,822	75,131
	기타		1,906	4,459	7,315	9,643	-

3. 지속가능한 해양쓰레기 관리방안

해양쓰레기는 발생원인자가 특정되지 않기에 쓰레기 표착이 발생한 기초지자체에서 수거·처리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충남도는 서해안의 조류 및 계절풍 특성에 따라 타 지자체 및 외국기인 쓰레기까지 유입되고 있어 초광역적인 수거지원시스템의 도입이 필수적이다. 해상기인 쓰레기의 경우 어업활동에 의한 것이 대부분으로 조업 중 발생한 어구의 해상불법투기 근절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하천을 통해 해양으로 유입되는 육상기인 부유쓰레기는 바다로 유입되기 전 사전 차단시설을 통해 일차적으로 수거하도록 하며, 하천변의 생활쓰레기를 사전에 수거토록 하여 하천으로의 유입을 원천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매해 반복되는 해양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방법으로는 일차적으로 개개인의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는 것, 그리고 관심과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해안가 주변에서는 더욱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해양플라스틱 저감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전주기적 해양쓰레기 관리를 강화하여, 해양플라스틱 쓰레기를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50%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단계별로는 발생예방 단계에서의 기초자료 수집과 함께 하천·하구에서의 쓰레기 유입차단시설 도입, 어업기인 쓰레기 발생 예방체계 등 인프라구축이 필요하다. 그 다음이 수거·보관 단계로서 신속한 수거와 보관을 위한 자원확충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운반·처리 단계인데, 해양쓰레기의 장기간 방치를 막고, 신속한 선별/처리 과정을 통해 재활용 자원으로서의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광역 해양자원순환센터의 도입과 함께 전용 집하장, 전용 운반차량 및 선박 등의 확충이 반드시 필요하다. 해양쓰레기 문제는 바닷가에 위치한 지자체만의 노력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분리수거 및 지정된 장소에만 쓰레기를 버리는 등 작은 실천들이 깨끗하고 건강한 바다를 지키는 유일한 방안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현안연구

03

공주문화도시 조성계획에 따른 문화영향평가 사례와 시사점

이인배 | 충남연구원 경제·산업연구실 수석연구위원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문화영향평가는 「문화기본법」에서 국민의 문화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서는 문화영향평가를 통해서 각종 정책 및 계획의 시행으로 발생하게 될 주민의 문화권 침해나 지역의 문화적 자산을 파괴하는 피해를 줄임으로써, 문화적 삶의 환경을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공동체의 문화적 발전에 기여토록 하고 있다. 따라서 문화적 관점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정책과 계획을 분석 평가하여 해당 사업이 문화적 가치를 반영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에 지역문화진흥법에 의한 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계획의 수립에 있어서도 문화영향평가를 실시를 권고하고 있다. 따라서 문화도시에서도 문화영향평가를 통해서 각종 정책 및 계획의 시행으로 발생하게 될 주민의 문화권 침해나 지역의 문화적 자산을 파괴하는 피해를 줄임으로써, 문화적 삶의 환경을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공동체의 문화적 발전에 기여토록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근거에 의하여 공주문화도시 조성계획 수립에서도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문화영향평가 결과를 토대로 하여 조성계획과 연계하여 해당 사업이 주민의 문화권을 신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시도되었다. 이와 연계하여 문화컨설팅을 추진하여, ‘공주시 문화도시 조성계획’이 문화영향평가의 시행 목적과 조화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지역중심 시민주도형 도시문화 거버넌스를 통한 문화도시가 조성될 수 있도록 문화영향평가를 추진하여 사업의 실효성과 주민의 삶 및 지역문화의 지속가능성 제고에 기여토록 하였다.

2. 문화도시와 문화영향평가

1) 문화도시와 사업목표

문화도시란 “문화적인 사회발전 구조와 체계를 갖춘 법적 지정도시”로서 문화의 가치와 가능성을 바탕으로 진화하는 사회적 생명체라 말하고 있다. 법적 개념정의로는 “문화예술·문화산업·관광·전통·역사·영상 등 지역별로 특색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 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도시”를 말한다. 이론적 정의로는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도시에서 시민이 공감하고 함께 즐기는 그 도시만의 고유한 문화가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사회현상 및 효과가 창출되어 발전과 성장을 지속하는 도시”라고 하고 있다.

문화도시시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심의위원회의 지정심의 의결결과를 토대로 지정을 하게 되는데, 지자체는 문화도시 지정 공표를 근거로 본 사업의 실행을 위한 준비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여기에서 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심의절차 진행 중 제출자료에 문화도시사업에 대한 문화영향평가 결과자료를 문화도시 지정을 신청한 지자체에서 사전에 실시하여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공주시에서도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수립하면서 자체적으로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하였다.

그림 1 | 문화도시 지정심의 절차 구성 주요내용

추진 절차	지정심의의뢰	도시지자체	• 문화도시 지정심의의뢰서 제출
	↓	심의회	• 심의절차 진행요건 확인(행정/계획/결과/제출자료)
	↓	지정심의 절차진행	• 문화도시 지정심의 진행 - 가치/가능성/실행능력 등 - 서면/발표/현장답사/토론 • 문화도시 선정투표(필요시) • 사업지원 결정심의 진행(내용/규모 등)
	↓	최종판단	• 문화도시 지정심의 최종회의 결과 확인 • 도시지정여부 최종 판단
	↓	문화도시지정	• 문화도시 정식 지정
심의 절차 진행 중 제출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도시 지정심의 의뢰서 및 문화도시조성계획(문체부 승인+예비사업결과 반영안) • 예비사업 추진현황 및 이행결과 기록자료 • 도시 기본현황 자료(휴먼-소프트-하드 업데이트) • 문화도시사업의 문화영향평가 결과자료(도시지자체 자체시행-사전) • 광역-기초 간 문화도시 추진·지원협약서 • 도시지자체의 문화도시 조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도시 추진 전문조직 구성 및 운용현황 • 문화도시 지정·활성화사업 실행세무계획(지정 5개년) • 사업성과목표(안)[문화도시사업 3년차도 시점까지]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6. 12), 문화도시 지정 및 지원방안 연구

이와 관련한 문화도시 사업 기초모델 설계의 사업목표는 문화생태계, 도시브랜드, 도시발전구조·효과와 주요내용은 도시 문화생태계 구축, 도시 문화브랜드 형성, 도시발전구조 및 지속효과, 지역 정체성 획득 등으로 하고 있다. 이는 문화영향평가의 평가요소와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¹⁾ 이상에서 살펴본 문화도시의 사업핵심가치와 기초모델 설계의 사업목표는 문화영향평가의 평가지표와 관련이 되는 것이다.

2) 문화영향평가 평가유형과 지표

문화영향평가는 「문화기본법」에 의해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제도로서 “문화적 가치가 사회적으로 확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2019년 9월말까지 문화체육관광부가 시행을 하였거나 지원한 문화영향평가는 총 105건으로 그 중 문화도시·문화특화지역 조성은 13건이었다. 그리고, 2019년까지 이루어진 문화영향평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시행하는 경우와 법령 및 조례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경우로 나뉜다. 후자와 관련하여 2019년 9월말 기준으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서울특별시, 경기도 및 전라남도,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서울특별시 성북구, 경기도 성남시 및 강원도 춘천시가 문화영향평가 관련 조례를 마련하였다.²⁾

2020년에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영향평가 유형은 지금까지 평가방식에 따라 유형을 구분하던 것에서 벗어나, 평가심도의 수준 및 단계에 따라 진단평가-약식평가-기본평가-심층(전략)평가 등 총 4단계로 나누어 졌다.

현재 문화영향평가의 평가지표 체계는 3대 평가영역인 문화기본권, 문화정체성, 문화발전 등의 공통지표와 각 평가대상 사업을 고려한 특성화 지표로 구분된다. 이 중 공통지표는 평가영역별로 각 2개 지표에 총 6개 지표로 이루어지며, 지표별로 세부 고려사항을 검토하여 평가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특성화지표는 평가대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수행기관이 자율적으로 개발하여 적용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와 같은 평가지표 체계는 2016년부터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2020년에는 평가지표와 세부평가지표가 일부 변경되었다.³⁾

3) 문화도시의 목표와 문화영향평가 평가지표

문화도시의 목표는 도시 문화생태계 구축, 도시 문화브랜드 형성, 도시발전구조 및 지속효과, 지역 정체성 확립 등이며, 문화영향평가의 평가지표는 문화기본권, 문화정체성, 문화발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이들 문화도시의 목표와 문화영향평가 지표간에 어떠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문화영향평가의 목적을 달성하고, 평가결과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Ⅰ 그림 2 Ⅰ 문화도시의 목표와 문화영향평가 평가지표의 관련성



3. 공주문화도시 조성계획에서의 문화영향평가 적용사례

1) 공주문화도시 조성계획

공주문화도시는 문화공간이 유행처럼 사라지는 일시적인 문화소비만을 위한 곳이 아니라 지속성이 있는 지역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도시 곳곳에 생생하게 살아있고 층층이 쌓여 있는 역사시간의 단면을 공유하고 향유함으로써 공주의 역사문화를 보존하는 것이다.

공주문화도시의 목표는 역사전통 분야의 기본적인 가치를 지향하며, 지역성에 기반하는 문화특화 및 도시 정체성 구현을 통한 지역사회효과 창출로 설정하였다. 이에 공주문화도시는 역사전통분야의 ‘안녕, 이 이야기문화도시 공주’를 실현하기 위해 역사도시에서 시민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공주의 역사(히스토리: HI-STORY)를 활용한 7대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1) 문화체육관광부(2016. 12), 문화도시 지정 및 지원방안 연구
2)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9), 문화영향평가 대상 선정 및 평가유형화 기준 연구에서 요약정리
3)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20), 문화영향평가의 지속발전을 위한 법제 및 운영체계 개선방향 연구에서 요약정리

Ⅰ 그림 3 | 공주문화도시 비전 및 목표



자료: 공주시(2019), 공주문화도시 조성계획

공주문화도시 조성의 핵심가치는 역사를 이야기하다, 사람을 이야기하다, 문화를 이야기 하다 등 3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공주문화도시는 역사와 사람, 역사와 문화, 사람과 문화를 이야기로 연결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따라서 역사와 문화는 공주의 문화유산을 통해 과거와 현재, 미래가 연결되도록 하고, 역사문화자원의 브랜드와 아카이브 구축, 이야기포럼 등의 방식을 통해 이야기로서 만남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역사와 사람의 연결은 역사문화적 정체성을 교육을 통해 시민의 자산으로 활용하고, 이를 이야기할 수 있는 축제참여와 교육 등의 방식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한다. 문화와 사람은 공주문화의 개방성을 확대하고 서로 다른 분야, 세대, 문화의 사람들이 만날 수 있는 기회와 장소를 제공함을 목표로 하고 있다.⁴⁾

문화영향평가에서는 주요사업으로 7대 분야 33개 사업으로 제시하였는데, 평가결과를 토대로 하여 유사성, 중복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통폐합을 실시하였다. 또한 지역주민 간담회와 문화리더 간담회, 문화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해 사업계획을 보완·수정하여 역사전통형 분야의 사업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문화도시 사업계획으로 제안하였다.

2) 문화도시 문화영향평가 결과

공주문화도시 문화영향평가방법은 관련 문헌조사와 정책보고서 검토, 통계자료, 사업 대상지에 대한 직접 현장조사, 연구진 브레인스토밍을 통한 시범사업에 대한 이해도 및 이슈 도출, 문화도시 참여자 및 수혜자를 대상으로 한 FGI(Focus Group Interview) 및 전문가 평가와 종합 평가단 현장 평가 등으로 이루어졌다. 공주문화도시 문화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주요내용은 역사문화 중심형으로의 집중과 문화거버넌스의 이행구조 마련, 문화인력의 지역간 격차 좁히기, 문화인적 자원의 활용, 사업의 대내외 홍보와 문화의 경제화 등에 대한 반응을 제안하였다.

4) 공주시(2019), 공주문화도시 조성계획

Ⅰ 표 1 | 공주문화도시 33개 사업과 문화영향 지표 관련 평가내용

7대항목 33개 사업	문화영향평가 지표 해당	문화영향 관련 사업
• 역사유산의 지역정체성 확립		문화기본권
- 공주이야기도시 포럼	기본권/표현 및 참여	* 문화향유: 문화의일상화(컬처올라이프, 우리동네학습공간), 문화의생활화(생활문화플러스, 이야기페스타) 문화수요충족 (공주이야기 소풍, 달리는이야기버스), 시민문화소통(문화융합리빙랩, 우리동네자랑하기), 이야기문화공동체 (공주문화관광재단설립, 공주문화도시지원센터, 공주시민문화디자인단), 문화기부활성화(기업사회공헌, 이야기재능기부)
- 공주이야기도시 브랜딩	기본권/ 문화접근, 향유	* 표현 및 참여: 지역내문화교류(커뮤니티페스티벌, 아트마켓), 문화네트워크구축(문화갤러리, 문화이촌, 문화브릿지), 문화인력강화(아티스트레벨업, 시민문화스쿨), 문화매개인력 양성 (도시문화총괄기획자, 공주컬처메이커, 마을이야기꾼 양성)
- 공주메모리맵	정체성/ 유무형유산 활용	
- 공주이야기책 도서관	정체성/ 문화공동체	
- 이야기 스카우트	정체성/ 문화공동체	
• 흥미로운 생활문화 활성화		문화정체성
- 컬처올라이프	기본권/향유, 정체성/문화공동체	* 문화유산경관영향: 도시의 문화적가치브랜딩 (공주이야기포럼, 공주이야기도시브랜딩)
- 우리동네 학습공간	기본권/표현, 정체성/문화공동체	* 공동체영향: 지역문화아카이브구축 (공주메모리맵, 공주이야기책도서관, 이야기스카우트)
- 생활문화플러스	기본권/표현참여, 정체성/문화공동체	
- 이야기 페스타	기본권/표현참여, 정체성/문화공동체	
• 시민민족 문화향유 수요 충족		문화발전
- 공주이야기 소풍	정체성/유산활용, 기본권/표현 참여	* 문화 다양성: 커뮤니티 페스티벌, 문화이촌, 문화브릿지, 아트마켓, 문화갤러리
- 달리는 이야기 버스	기본권/ 접근성, 표현참여확대	* 창조성 영향: 문화창업비즈니스 (문화창업인큐베이팅, 이야기산업집중육성), 문화거점조성(시민문화플랫폼 조성, 이야기 창작소 조성, 이야기가 흐르는 거리)
- 문화융합 리빙랩	기본권/참여,정체성/공동체,발전/창조	
- 우리동네 자랑하기	기본권/표현참여, 정체성/유산활용	
• 문화역량 교육강화와 매개인력 양성		
- 아티스트레벨업	발전/창조자본	
- 시민문화스쿨	발전/창조자본, 기본권/표현참여	
- 도시문화 총괄기획자	발전/창조자본, 문화공동체	
- 공주컬처메이커	발전/창조자본, 문화공동체	
- 마을이야기꾼 양성	발전/창조자본, 기본/표현, 정체/유산	
• 문화조직(단체) 공동체 구축		
- 공주문화관광재단 설립	발전/창조기반, 문화공동체	
- 공주문화도시지원센터	발전/창조기반, 문화공동체	
- 공주시민문화디자인단	발전/창조자본, 기본/표현, 참여	
- 기업사회공헌	발전/창조자본	
- 이야기 재능기부	기본권/참여, 정체성/사회자본	
• 문화도시 재창조		
- 문화창업 인큐베이팅	발전/창조자본	
- 이야기산업 집중 육성	정체성/유산활용, 발전/창조자본	
- 시민문화플랫폼 조성	기본권/표현,정체성/공동체,발전/기반	
- 이야기 창작소 조성	정체성/문화공동체, 발전/창조기반	
- 이야기가 흐르는 거리	기본/표현참여, 발전/창조기반	
• 지역문화 교류의 장 활성화		
- 커뮤니티 페스티벌	기본/표현 참여	
- 아트마켓	기본/표현 참여, 발전/창조기반	
- 문화갤러리	기본/표현 참여, 정체성/공동체	
- 문화이촌	발전/ 창조자본, 정체성/사회적자본	
- 문화브릿지	발전/ 창조자본	

자료: 공주시(2019), 공주문화도시 조성계획

Ⅰ 표 2 Ⅰ 공주문화도시 문화영향평가에서 정책적 제언

계획의 내용		평가 내용	정책적 제언
사업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33개 사업들이 역사문화중심형이 드러날 수 있도록 사업들을 재조정하도록 함6개 권역의 기존 공간에 사업을 배치하기 보다는 주민들의 문화권, 문화정체성, 문화발전이 되도록 재배치하도록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공간중심 사업배치에서 전략목표를 6개 권역 지역특화에 초점을 두도록 함백제권 문화자원 이외 마을역사자원을 이야기로 끌어내도록 함농경문화, 자연예술 특화지역의 경우 문화이촌, 커뮤니티페스티벌 등의 사업을 추가하고, 산업문화특화지역에는 문화창업인큐베이팅 사업을 추가하도록 함
사업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사업방향에 따른 문화 거버넌스 이행로드맵 등 지정 절차를 따르고 있음전략과 목표에 따른 무리한 로드맵들을 실행 가능하도록 재배치하게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관주도적 하향적 사업방식에 벗어나 예술가, 지역주민들의 문화적 욕구가 반영된 논의와 협업구조가 될 수 있는 문화 거버넌스 방식이 생활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우선 도입되도록 함제안된 33개 사업 중 유사한 사업은 통폐합하고 사업명을 쉬운 용어로 수정하도록 함개별 사업들을 사업방향과 운영상 우선순위를 정하여 로드맵을 재구성하도록 함
세 부 제 언	역사유산의 지역정체성 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문화적 가치브랜딩, 아카이브 구축 등의 사업은 33개 사업 내에서 역사문화중심형이 드러날 수 있도록 구조화함논의과정에서 권역 내에서, 사업 내에서 주민의 문화권이 살아날 수 있는 문화 거버넌스를 강조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공주이야기포럼은 가장 중심적 문화거버넌스 체제를 갖추도록 함공주이야기도시브랜딩, 공주메모리맵은 역사문화중심형의 기본을 갖추고 6개 권역의 고른 이야기콘텐츠를 발굴하도록 함이야기책도서관, 이야기스카우트는 6개권 모두에 배치하고 주민인터뷰 등 청소년들의 참여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함메모리맵 역시 6개 권역으로 확산하여 자체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함
	흥미로운 생활문화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문화의 일상화와 생활화를 위해 지역문화공간과 프로그램을 지역주민생활패턴에 맞추도록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주민자치센터 등 기존 공간활용을 넘어 원도심에서는 건물매입으로 예술가들에게 임대해주고, 농촌 빈집, 창고 등 활용한 문화공간리모델링으로 지역생활문화동호회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주민자치센터, 도서관 등의 공공장소, 그리고 새로운 문화공간에서 컬처올라이프, 생활문화플러스, 이야기페스타 사업이 활성화될 것임‘우리동네학습공간’은 프로그램명으로 하기보다는 빈집 창고 등을 활용한 문화공간매입 및 리모델링 사업명으로 변경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봄
	시민 문화향유 수요충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문화수요충족과 시민문화소통을 위해 결혼이주여성, 이주노동자를 포함하여 지역민의 문화욕구 조사와 다문화인식개선프로그램 사업에 포함하도록 함문화자원의 쌍방향교류 필요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공주이야기소풍, 달리는 이야기버스 사업은 원도심야기기전달이 아닌 농촌의 자연환경 마을이야기도 전달되는 방식을 담도록 함문화융합 리빙랩은 지역주민들의 문화 거버넌스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사업이므로 6개 권역 모두 배치하고 퍼실리테이터를 배치하도록 함우리동네자랑하기는 마을이야기꾼, 이야기재능기부와 결합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보임
	문화역량 교육강화와 매개인력 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아티스트레벨업, 시민문화스쿨, 도시문화총괄기획자, 공주컬쳐메이커, 마을이야기꾼 등의 사업은 문화재단 및 문화도시센터가 직접 관할할 프로그램으로 보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시민문화스쿨을 통해 공주컬쳐메이커, 마을이야기꾼 양성사업을 운영하도록 함고령사회혁신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는 ‘이야기할머니’ 사례를 도입하여 마을이야기꾼을 양성하고, 마을마다 확산하도록 함 청소년활동가뿐 아니라 전 연령, 결혼이주여성, 외국인노동자 층에서도 양성함

계획의 내용		평가 내용	정책적 제언
세 부 제 언	문화조직 (단체)공동체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문화재단, 문화도시센터는 공공조직으로 구분함이야기재능기부에서 이야기나눔으로 용어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사업의 지속성을 위해 재단과 지원센터는 사업로드맵의 우선순위에 있어야할 것임. 지원센터는 소규모형태로나마 지정 전 시범프로그램을 운영할 주관처로 구성되어야할 것임공주시민 문화디자인단 역시 문화거버넌스 기능할 중요구성이므로 로드맵에서 우선순위로 배치되어야할 것임
	문화도시 재창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문화창업 비즈니스, 문화거점 조성은 6개 권역으로 점차 확산하도록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이야기산업집중과 시민문화디자인단은 내용상 유사할 것으로 보여 통합운영 가능시민문화플랫폼이 현재는 하숙마을을 거점으로 하고 있는데 이 역시 6개 권역으로 확대되어야할 것이며, 이야기창작소 역시 6개 권역 확대지원센터에 문화창업인큐베이팅 주관하여 조직화
	지역문화 교류의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지역내 문화교류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커뮤니티 페스티벌, 아트마켓, 문화갤러리, 문화이촌, 문화브릿지 사업을 배치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은 문화공동체 촉진뿐 아니라 공주시의 사활을 건 사업으로도 볼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커뮤니티 페스티벌은 전체권역 대화형식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6개 권역에서 특화된 이야기프로그램 페스티벌 준비해오는 단계로 추진함문화이촌, 문화브릿지는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공주시의 혁신프로그램으로 단순교류가 아닌 전문적인 인력배치와 사업이 운영되도록 함아트마켓, 이야기가흐르는 거리 등의 사업은 공동협업구조로, 문화갤러리는 빈집 창고 등 리모델링으로 문화공간화 함

자료: 공주시(2019), 공주문화도시 조성계획

3) 문화영향평가의 반영내용과 시사점

공주문화도시 문화영향평가의 결과와 지역주민의 의견,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하여 총 7개 분야와 7개 전략 과제, 14개의 세부사업을 제안하였다. 이는 제안된 33개 사업 중 유사한 사업은 통폐합하고, 사업명칭은 시민들과 친숙하면서 인지하기 쉽게 재구성을 하였기 때문이다. 이들 사업분야를 살펴보면, 문화영향평가 지표에 관련된 문화기본권과 문화정체성, 문화발전 등의 평가영역에 근거하여 제시를 하였고, 전략과제와 세부사업 역시 평가지표와 고려사항 등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 등으로 구성하고 있다.

Ⅰ 표 3 Ⅰ 공주문화도시 문화영향평가 후 사업계획

분야	전략과제	세부사업
Heritage 유산, 역사적가치	역사문화유산의 가치 발굴	1. [역사의 재해석] 공주의 시선 2. [문화가치발굴] 이야기포럼
Identity 본질, 문화정체성	역사유산의 지역정체성 확립	1. [브랜드] 공주문화도시 도시브랜드개발 2. [아카이브] 공주문화아카이브 “다담(多談)”
Satisfaction 만족, 문화향유	시민만족 문화향유 수요 충족	1. [문화향유] 찾아가는 이야기버스 2. [일상문화] 우리동네 클래스
Teaching 교육, 문화역량	문화역량교육 강화와 매개인력양성	1. [문화예술교육] 시민문화스쿨 2. [인재양성] 공주컬쳐메이커
Organize 조직, 문화공동체	문화공동체 구축	1. [거버넌스] 공주문화시민디자인단 “공시디” 2. [추진거점] 문화도시센터
Recreate 재창조, 문화재생	도시문화의 재창조	1. [문화플랫폼] 문화복합공간 “하숙” 2. [문화창업] 문화창업인큐베이팅
Yard 마당, 문화교류장	지역문화교류의 장 활성화	1. [문화교류] 이야기페스타 2. [네트워크] 문화브릿지

자료: 공주시(2019), 공주문화도시 조성계획

특히, 공주문화도시 조성계획 수립시 문화영향평가의 적용사례를 살펴보면서 제시할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주시와 같은 지방문화도시의 문화영향평가 제도적 장치의 도입이다.** 2020년에 광역 지방자치단체 중 서울특별시, 경기도 및 경상남도 창원시 등이 문화영향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부산광역시와 전라남도, 충청북도 등과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서울특별시 성북구, 경기도 성남시 및 강원도 춘천시가 문화영향평가 관련 조례를 만들고 자체적인 문화영향평가 수행을 준비중에 있다. 이와 같이 충청남도과 공주시 및 부여군 등과 같은 역사문화와 문화중심도시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문화영향평가 제도의 도입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문화영향평가의 의무적 대상사업을 우선 선정하여 실행해야 한다. 문화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총 32종류의 사업들 가운데 의무적 대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업들로 선택된 사업은 ①문화도시 사업 ②도시 재생사업 ③문화재(문화유산) 복원·활용사업 ④공간시설 및 공공·문화체육시설 사업 ⑤관광개발기본 계획 ⑥문화 및 집회시설 조성 ⑦도시기본계획 ⑧지역관광개발 사업 ⑨도시(재)개발사업 ⑩광역관광개발 사업 등의 순이었다. 이에 따라서 충청남도과 각 시군에서도 이상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것도 고려되어야 한다.

셋째, 사업계획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평가품의 선정하여 평가대상들의 개별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영향평가 지표는 공통지표로 문화기본권, 문화정책성, 문화발전과 특성화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의 평가지표는 문화기본권으로 향수권, 참여권, 경관·환경권, 기반조성권 등과 문화다양성으로 시민다양성, 차이수용성, 정체성, 예술다양성 등을 평가영역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충남과 각 시·군에서 문화영향평가의 지표영역을 구성해서도 중앙정부의 평가지표를 근간으로 한 지역특성의 평가지표품을 구성토록 해야 한다.

넷째, 평가절차와 방식도 사업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공주문화도시는 제3의 기관에 의한 전문평가의 기본평가가 적용이 되었는데, 이는 기존의 자체평가에서 진단평가와 약식평가 및 전문평가의 기본평가와 심층평가 등의 평가유형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사업유형과 규모 등에 따라서 평가절차와 방식도 대상사업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문화영향평가의 특성화지표에 대한 평가를 강화해야 한다. 공주문화도시의 문화영향평가 지표를 각 사업별로 문화영향과 관련 사업을 분석한 결과, 문화기본권과 문화정책성, 문화발전 등 3가지의 평가 지표영역만을 검토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따라서 공주가 역사전통중심형 문화도시로 육성되기 위해서는 역사문화를 원형으로 한 문화도시의 주요사업과 활동에 공주의 특성화 지표도 반영된 관련 사업을 검토하여 차별화된 문화도시로 육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공주문화도시에 대한 문화영향평가의 적용사례를 검토하여 앞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시사점을 바탕으로 앞으로 문화도시뿐만 아니라 관련 대상사업에서도 바람직한 문화영향평가로 개선이 되면서 적용되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4. 정책제언

문화영향평가는 국민의 문화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것으로 문화도시를 비롯한 문화체육관광부 등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계획에 시행되고 있다. 공주문화도시 계획 역시 이런 제도에 의하여 조성계획을 수립하면서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하였다.

이에 대한 적용사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차원에서 문화영향평가 조례 등 제도의 도입, 평가 의무대상사업의 선정, 지역특성을 고려한 평가지표의 선정과 평가유형 적용, 평가절차와 방식의 적정화, 특성화 지표의 강화 등의 시사점이 도출되었다. 따라서 충청남도과 각 시·군에서도 초기 단계로 시도되고 있는 일부의 타 지방자치단체의 선도적인 사례와 같이 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적극적인 관련 사업의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Ⅰ 참고문헌 Ⅰ

1. 공주시(2019), 공주문화도시 조성계획
2. 문화체육관광부(2016), 문화도시 지정 및 지원방안 연구
3.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9), 문화영향평가 대상 선정 및 평가유형화 기준 연구
4.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20), 문화영향평가의 지속발전을 위한 법제 및 운영체계 연구

※ 본 원고는 단기교육(2020. 10. 1~11. 30)의 연구결과보고서로 작성함



열린이슈

놀이가 좋아 모인 엄마들의 이야기

김영옥 ! 교육공동체 협동조합 노리아이 해꿇놀이연구소 소장

교육공동체 협동조합 노리아이는 ‘우리 아이들은 우리가, 온 마을이 지켜야 한다’는 생각으로 엄마들이 모여 만든 기업이다. 전통매듭을 잘하는 엄마, 전래놀이를 잘하는 엄마, 숲밧줄을 잘하는 엄마, 연극놀이를 잘하는 엄마, 요리를 잘 하는 엄마 등 각각의 재능을 살려서 놀이로 아이들을 만난다. 아이들이 필요로 하는 곳은 어디든지 달려가서 아이들과 신나게 놀이를 한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다 같이 행복하게 사는 것을 꿈꾼다. 불행한 아이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활동하고 있다.

우리의 또 하나의 꿈은 연구를 통해 새로운 교재, 혁신적이며 재미있는 교구를 제작해서 아이들과 다양한 놀이로 즐겁게 만나는 것이다.

충남연구원의 공모 사업은 우리가 꾸었던 꿈에 한발 더 다가 갈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이 글에서는 교육공동체 협동조합 노리아이의 부설 ‘해꿇놀이연구소’가 2020년 충남연구원의 공모 사업 지원을 받아 제작한 <충남아 놀자> 교구 제작 과정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해꿇’은 ‘해가 질 때 까지 놀다’라는 의미를 담아 만든 이름이다).

해꿇놀이연구소에서는 아이들에게 충남에 대해 어떻게 알려 줄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놀이를 통해 충남을 알아가도록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 모아졌고, 자연스럽게 충남 보드 놀이를 만들게 되었다.

아이들이 보드놀이를 하면서 충남의 시·군 지역의 생활환경과 문화를 자연스럽게 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각 지역의 특성, 특산물, 자연경관, 인물, 먹거리, 축제 등 지역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같이 공

부하며 교구 개발 연구에 박차를 가했다. 우선 충남 지역을 세분화하였고, 지역의 역사를 공부하였다. 또한 놀이 방향을 잡기 위해서 무려 23번의 회의를 하였다. 자주 모여 회를 할수록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고 또 하나의 놀이 교구가 만들어 지기도 했다. 혼자 지혜보다는 여러명의 지혜가 큰 빛을 냈다.

우리 아이들이 놀면서도 스스로 알아가는 재미를 찾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연구하고 우리의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면 놀면서 경험했던 기억은 쉽게 잊어지지 않음을 우리는 알고 있게 놀이연구가 즐겁게 느껴지고 아이들 또한 그러길 바라며 엄마들은 힘을 내며 즐겁게 놀이연구에 전념한다.

하지만 막상 자료를 조사하는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지역 탐방하는 것이 쉽지 않았고, 지역의 사진 자료를 찾는 것도 힘이 들었다. 지역 축제가 모두 취소되어 축제 사진을 찍지 못하는 난감한 상황은 교구 개발에 걸림돌이 되었다. 몹시 안타까워하던 때에 이미 ‘보드놀이’를 만들어서 아이들과 함께 놀이를 해본 분을 만나 조언을 받았다. 감사하게도 그 분은 직접 만들어서 활동했던 놀이카드를 주었고, 그 놀이카드를 실제로 경험해 보면서 우리가 해야 할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비로소 놀이 규칙과 방법에 대한 연구가 구체화 되면서 놀이카드의 모습이 잡히기 시작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 하였다. 가상으로 만든 놀이를 다양한 방법으로 재현하면서 아이들의 연령을 고려하였고, 역사에 대해 다시 공부하는 시간도 가졌다.

놀이카드를 만들면서 우리 지역의 역사를 새롭게 알게 되었고, 우리 지역의 특산물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다. 또한 어르신들의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했다.

▼ 해꿇놀이연구소 사람들



놀이카드를 만든 다음, 놀이지도 판을 어떻게 만들까 의논한 끝에 충남 지역을 그대로 만들어 보았다. 놀이를 통해 각 지역의 위치를 자연스럽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위치가 정확하게 그려진 지도가 필요했다. 충남도청의 관광지도를 받아 그대로 그림을 그려 놀이를 해보고 놀이판의 크기 조절을 하면서 만들어 갔다. 몇 번의 시행착오를 거쳤지만 지도 크기를 정하는 과정조차 대단히 즐겁고 재미있었다.

가장 힘이 들었던 부분은 지도를 정확하게 그리는 부분이었는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의뢰하기에는 예산이 너무 부족했다. 고민하며 방법을 찾고 알아보면 중 대학생을 소개 받아 지도를 만들 수가 있었다. 대학생은 일자리가 없어서 힘들어 하던 시기에 도움이 되어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우리가 더 감사했고, 꼼꼼하고 멋지게 충남의 지도를 잘 그려준 대학생에게 더 많이 챙겨 주지 못해 미안하였다.

한 가지 더 바라는 것은 충남연구원 안에 공모에 선정된 이들이 수시로 소통할 수 있는 담당자가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아울러 공모에 선정된 연구동아리들이 서로 정보를 나누고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해 준다면 더 좋은 결과를 나오게 될 것이다.



놀이판이 완성되자 재능 기부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였지만 사람들을 만날 기회를 갖기가 어려웠다. 재능 기부를 가기로 했던 지역아동센터조차 코로나 때문에 갈 수 없게 되었고, 마을 어르신들과의 만남도 기약할 수 없었다. 코로나19가 만들어낸 안타까운 상황이었다.

힘들게 만들어 낸 교구를 활발하게 활용을 못해 아쉽고 속상했다. 시간이 흐르고, 다행히 학교에서 아이들과 놀이를 할 수 있게 되어 재능 기부를 했다.

아이들의 반응이 무척 좋았다. 아이들은 신이 나서 자기가 갔던 곳을 기억하며 이야기 했고, 가지 않은 지역은 가보고 싶다고 말했다. 특히 역사 인물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보였다.

아이들이 지역 특산물에 대한 이해를 넓히면서 흥미롭게 놀이를 즐기는 모습을 보자 교구 개발의 보람과 뿌듯함이 온몸에 느껴졌다.

학교에 이어 마을회관에서도 어르신들과 〈충남아 놀자〉 교구를 갖고 놀이를 하였다. 옛날 추억 이야기가 나오고, 옛 음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면서 웃으로 놀이를 하니 놀이를 쉽게 이해하고 즐기셨다.

그동안 더 많은 재능 기부를 하고 싶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기회가 많지 않았다. 그래서 아쉬운 마음이 크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앞으로의 날들이 있기에 희망을 잃지 않는다.

이 희망이 우리의 노력이 가정에서 마을로 점점 커 갈 수 있게 아산시와 충남도의 지원이 지속적으로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우리에게는 아이들이 있고 아이들은 놀이에 목말라 하고 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고 내 아이만 안전하게 키운다고 절대 안전하지 않다. 마을과 학교 가정 모두가 안전해야 우리 아이와 세상 모든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클 수 있다. 내 아이만 보지 않고 우리들의 아이라는 따뜻한 관심과 마음, 이웃과 소통하며 함께 하는 마을이 있으면 어른과 아이들이 행복한 마을이 될 것이다. 그 마을을 만들기 위해 당연히 우리가 앞장서고 있다.

우리는 한 아이의 엄마이자 당연한 인간으로서 아이들과 즐겁게 놀 준비가 된 여성이다. 2021년도 우리는 힘차게 준비한다. 이 세상 모든 아이들이 평등하게 행복하기를 바라며...



오피니언

01

포스트 코로나와 로컬뉴딜: 마을민주주의와 지역순환경제

유창복 | 미래자치분권연구소 소장

코로나19는 분명 위기지만 동시에 기회이기도 하다. 1년 전만 해도 기후위기는 몇몇 환경단체들의 지나친 기우로 취급되었지만, 이제는 많은 시민들이 기후위기가 훨씬 더 강력한 재난을 몰고 올 것이라고 걱정한다. 문재인 대통령도 드디어 '2050 넷제로,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비대면의 불평등성과 로컬택트

코로나19 감염재난은 장기화를 넘어 일상화될 것이라고 한다. 그래서 'with 코로나'란다. 그렇다면 한 두 달도 아니고, 기약 없이 계속 비대면으로 일상을 꾸려갈 수는 없다. 더욱이 비대면은 불평등하다. 돌봄대란은 돌봄독박으로 이어지고, 맞벌이는 물론 한 부모 또는 조손(祖孫) 가정의 아이들이 방치된다. 자영업자가 무너지고, 노약자가 더욱 위험에 노출된다. 비대면 영업 중단으로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가 사라지고 수입이 끊겨 당장 생존의 위기에 내몰린다. 20대 여성의 자살률이 급증한다.

장거리 이동과 여럿이 함께 모이는 것이 위험하고, 모인 이들의 익명성이 팬데믹으로 빠져들게 한다면, "만나지 말자"가 아니라 '안전하게 만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근거리로 이동하고, 소규모로 분산해서 만나고, 평소에 안면 있는 사람들과 만나면서 일상을 유지해야 한다. 적절한 거리두기와 대면적 일상의 영위가 가능한 '신뢰 기반의 로컬 관계망'인 마을이 바로 생활 방역이자 생활 안전망이다. 근거리 생활권인 읍면동을 중심으로 필요한 시설과 서비스가 분산되고, 상호 신뢰가 있는 로컬을 중심으로 일상이 재편되고, 노동과 서비스가 재구성되어야 한다. 비대면이 아니라 안심대면, 안전대면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 언택트(un-tact)에서 로컬택트(local-tact)로 전환해야 한다.

기후위기와 그린뉴딜

기후위기를 이겨내기 위한 그린뉴딜 정책의 핵심 목표는 첫째, 앞으로 30년 안에 탄소배출 순증이 제로(Net Zero)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려면 우선 앞으로 10년 안에 탄소배출을 절반으로 감축해야 한다. 둘째 불평등 완화이다. 불평등이 극에 달했던 1930년 대공황기보다 심각한 불평등 상태인 지금, 불평등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흔들어야 불평등도 기후위기도 극복할 수 있다. 기후위기의 원인과 불

로컬뉴딜과 로컬회복력

평등의 원인에는, 탄소를 배출하는 산업체제의 강력한 기득권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정의로운 전환'과 일자리 창출이다. 탈탄소 산업 전환으로 불가피하게 수많은 해고자가 나타날 것이다. 적절한 생계대책과 이직의 대안이 없으면 탈탄소 전환은 아예 불가능하다. 이미 심각한 불평등 상태이며 재난으로 더욱 불평등이 더욱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사회적 안전망이 절실하다. 사회적 안전망이 부실하면 기후위기가 본격화되기도 전에 사회가 먼저 붕괴될 것이다. 가장 확실한 사회적 안전망은 일자리이다.

그린뉴딜을 지역사회에서 지방정부가 주민들과 협력을 통해 추진하는 실천 전략이 로컬뉴딜이다. 로컬뉴딜은 근린 수준의 읍·면·동 범위에서 활동하는 커뮤니티가 중심이 되서, 재난이 닥쳐도 그럭저럭 함께 살아낼 수 있는 회복력(resilience)을 만들어 쌓아가는 것이다. 동네에 공원과 마을정원을 만들고, 마을돌봄망을 구축하고, 폐기물을 버리지 않는 자원순환시스템을 가동해야 한다. 무엇보다 에너지를 절약하고 재생에너지를 생산하여 분산형 가상발전소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도시를 보행 친화적으로 뒤바꾸고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노후건물을 리모델링하고, 로컬푸드로 급식과 채식을 위한 먹거리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러한 로컬뉴딜의 과제는 시민의 참여가 기본원칙이다. 시민참여의 수준은 의견 제출 정도가 아니라, 지역에서 가장 절실하고 시급한 서비스가 무엇인지를 직접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참여의 효능감이 생겨야 지속적인 참여를 활성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주민들이 결정한 사항을 주민 스스로 직접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역사회의 주민들이 가장 절실하고 시급하게 여기는 문제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함께 해결에 나서고, 필요하다고 결정한 서비스를 주민들이 직접 생산하고 공급하며 이용하는 '공동생산자'(co-producer)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그래야 지역에서 일자리와 일거리가 만들어진다. 마을공동체가 자신들에게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직접 생산하고 소비하는 경제적 시스템으로 진화하고, 사회적 경제가 지역사회에 뿌리내릴 때 사회연대경제(지역순환경제)가 실현된다. 그래야 지역의 회복력(local resilience)이 만들어진다. 재난시대에 지속가능성은 지역의 회복력에 달려있다. 그래야 재난이 닥쳐도 일상으로 돌아와 그럭저럭 살아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융합적 협력과 주민자치회

최근 10여 년 동안 꾸준히 추진된 마을공동체 정책은 지역사회에 다양한 주민들을 등장시켰고, 등장한 주민들은 서로 연결되면서, '내 문제'에서 '동네 문제'로 의제를 옮기며 스스로 공공적 주체로 진화하고 있다. 이제는 마음과 뜻이 맞는 '이웃 세 사람'이 아니라 마음도 뜻도 맞지 않는 동네사람들과 함께 동네 문제 해결을 도모해야 한다. 그러려면 '나'보다는 동네 전체의 전반적인 생활에 도움이 되고 작게나마 혜택이 돌아가는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한다. 그것이 바로 로컬뉴딜의 과제들이다. 문제해결력의 핵심은 융합이다. 행정의 칸막이와 시민사회의 칸막이를 넘어서려면 '문제가 있는 곳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주체가 문제해결의 솔루션을 가진 자들을 초대하면서 시작해야' 한다. 동네에서 주민이 나서서 융합적 솔루션을 만들고 지속가능한 실행체(조직)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주민들이 직접 주도해 나가도록 지원해야 한다. 행정의 칸막이를 가로지르는 '융합-협업적 사업방식'을 사용해야 한다. 협력과 융합의 공론이 벌어지고, 실천을 추진하는 장소가 읍면동 주민자치회이면 좋겠다.



오피니언

02

코로나 낙인



이정재 | 충남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센터장

2021년 새해가 밝았지만 여전히 코로나19는 우리의 일상을 얹매이고 있다. 사그러질 듯 하다가 겹바람 한 번에 다시 살아 오르는 불길처럼 언제 꺼질지 모르는 아궁이를 보는 느낌이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전 국민이 힘들어 하고 있고 특히 낙인으로 인한 피해도 직접적인 감염이나 못지않게 크다.

필자도 코로나19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차별을 받은 적이 있다. 사실 낙인효과로 피해를 본 것은 메르스 유행시기부터였다. 2015년 여름 메르스로 온 나라가 시끄러울 때 전화로 집사람의 격앙된 목소리가 들려왔다. 당시 필자를 제외한 가족들은 대구에서 살고 있었는데 아이들이 다니는 초등학교 보건교사로부터 당분간 아이들이 학교에 등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전화를 받았다는 것이다. 이유는 저자가 천안 단국대병원에 근무를 하고 있고, 당시 단국대병원에 상당수의 메르스 환자가 치료받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해줬으면 한다는 것이다. 저자의 아이들은 아버지가 단국대병원에 근무한다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당한 것이다. 심지어 저자가 직접 보건교사와 전화통화를 하여 주말부부 생활을 하고 있고 필자의 전공과목이 정신건강의학과라서 메르스 환자와는 접촉할 기회가 없다고 설명을 하였음에도 말이다. 같이 근무하는 주위 동료에게 고향인 대구에게 배신과 차별을 당한 기분이라고 하소연하기도 했었다.

세월이 흘러 2020년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되고 대구 신천지 교회의 집단감염으로 대구 감염자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면서 단국대병원 동료들이 농담반 진담반으로 필자에게 신천지 교회에 다니는 건 아닌지 묻기도 하고 대구 출신이니 조심하는게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 물론 심각한 분위기는 아니었으나 과거 메르스 당시의 일이 생각이 나면서 불편한 기분이 드는 건 사실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병원 감염팀으로부터 감염자와 접촉하진 않았지만 출근을 하지 말고 그냥 2주간 집에서 자가격리를 한 후 아무 이상이 없으면 출근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병원에서 환자를 봐야하는 직업상 수고를 할 수 밖에 없었고 2주간의 자가격리가 끝난 후에도 상당기간 가족이 있는 대구에 내려가지 못하였다. 메르스 감염 때와는 반대로 제 2의 고향인 천안으로부터 다시 차별을 당했다는 기분이

들었다. 지금 생각하면 ‘웃픈’이야기로 넘길 수 있지만 저자는 우리나라 감염병 유행 시기마다 낙인 효과로 인해 마음고생을 제대로 한 셈이다. 요즘도 주위 동료끼리 이야기를 하면서 코로나19에 걸리는 것보다 병에 걸린 후 개인정보가 노출이 되고 주위의 따가운 시선과 차별이 더 큰 걱정이 된다는 이야기에 모두들 공감을 한다.

2020년 12월 통계청이 발간한 ‘한국의 사회동향’에 따르면 우리 국민은 코로나 확진되는 두려움보다 확진으로 받게 될 비난과 피해를 더 두려워하고 전반적으로 감염 책임을 환자 개인의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크게 나타났다고 한다. 이런 낙인 효과는 개인에게만 그치지 않는다. 감염자의 동선이 공개된 후 동선 근처의 의료기관이나 상점 등이 막대한 피해를 보는 것도 낙인 효과 때문이다.

낙인은 잘 알지 못하는 새로운 질병에 대해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끼고 그런 두려움을 타인에게 투사하면서 생기게 된다. 이런 사회적 낙인은 사회적 결속력을 약화시키고 특정 집단이나 개인을 부당하게 소외시킨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차별을 피하려고 질병을 숨기게 되고 진료가 필요한 상황에서도 병원에 가는 것을 꺼리게 되어 바이러스의 확산 가능성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더욱 심각한 건강문제와 보건 당국의 감염병 통제를 어렵게 만든다.





WHO에서는 사회적 낙인을 줄이기 위한 가이드라인¹⁾을 만들면서 언어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제시하였다(표 1).

표 1 | 코로나 언어의 중요성: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해야 할 것 ¹⁾	하지 말아야 할 것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우한, 중국, 아시아 바이러스
코로나환자, 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사망자	코로나 사례, 코로나 희생자
코로나 감염이 추정되는 사람	코로나 의심자, 코로나 의심 사례
코로나에 걸렸다. 감염됐다.	코로나 전파, 바이러스 화간, 전염
공식적인 의료 조언에 근거한 이야기	역병, 재앙, 유언비어 퍼트리기
긍정적 이야기	부정적이거나 위협적인 메세지 강조

낙인에 대처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부, 시민, 대중 매체, 주요 유명인과 지역사회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코로나19에 취약한 개인과 집단, 치료법, 의료서비스 및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대중에게 알려야 한다. 유명 연예인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런 역할을 해준다면 그 영향력은 훨씬 더 클 것이다. ‘덕분에 챌린지’처럼 의료업계 종사자들에게 경의를 표하는 캠페인은 지역 사회의 봉사자의 사회적 낙인을 줄이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일부 언론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근원을 찾으려고 하거나 ‘최초 감염자’를 찾아내려고 한다면, 개인의 행동과 환자의 책임에 더 무게를 두게 되어 질병을 가진 사람들에게 대한 낙인을 더 증가시킬 수 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잘못된 정보와 유언비어는 감염보다 더 빨리 퍼지고 이런 현상은 사회적 낙인과 차별의 원인이 되므로 기본적인 감염 예방 실천과 코로나에 대한 정확한 사실이 코로나19의 유행을 줄일 수 있다.

1) A guide to preventing and addressing social stigma associated with COVID-19, 2020 Feb, WHO.

누구나 예기치 못하게 코로나19에 감염이 될 수 있고 자신의 잘못이 없어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 감염병 확진자는 비난의 대상이 아니라 도와주어야 하는 대상임을 이해해야 한다.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이지만 멀지 않은 미래에 국가적 자부심과 공동체 연대 그리고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국가적 역경을 이겨낼 수 있었다고 말할 수 있는 날이 오길 기대한다.





해외리포트

함부르크 하펜시티 (Hamburg Hafencity): 함께 아이를 키우는 도시

이선주 | Bauhaus대학 박사

임준홍 | 충남연구원 지역도시·문화연구실 선임연구위원

1. 시대의 거울, 함부르크

독일 함부르크 하펜시티는 유럽의 대표적인 도시재생 사례로써 신항의 개설로 인해 쇠퇴한 옛 항만부지에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는 사업이 진행 중이다. 하펜시티는 한자 도시 함부르크의 중심을 가로지르는 엘베강 변에 위치하며, 2001년 착공을 시작으로 2025~2030년 사이 완공을 목표하고 있는 장기 프로젝트이다. 이처럼 함부르크시는 157ha의 부둣가를 재개발함으로써 도시면적의 40%를 확장하는 기회를 마련함과 동시에 시민들에게 45,000개의 일자리 및 7,000세대 주거공간, 다양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과 10.5km의 강변 산책로 등 휴식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공간의 제공을 목표하고 있다. 또한, 하펜시티는 지리적으로도 함부르크의 중심 시가지에 있는 시청과 800m 떨어진 거리에 위치해 시민들이 일상생활 안에서도 접근이 편리하다.¹⁾

특히, 하펜시티는 약 20년이라는 긴 개발 기간만큼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하는 시민과 사회의 요구를 반영해 왔다. 대표적인 예로, 시민과 지역 상인, 행정기관과 역사 관련 연구소, 하펜시티 함부르크 유한책임회사 등으로 구성된 단체 'Netzwerk HafenCity e.V.'를 통해 하펜시티를 개발하기 위한 거버넌스의 구축을 들 수 있다.²⁾ 더불어 세계적 이슈인 지속가능한 발전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하펜시티는 연료전지, 태양열, 소규모 열병합발전시설 그리고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도입해 도시와 건물의 전기와 난방을 공급하며, 이를 통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최소화하고 있다.³⁾ 이밖에도 개발 대상지

1) Themen Quartiere Projekte 2017, 85-87.

2) Netzwerk HafenCity e.V 2014, 5.

3) <https://www.hafencity.com/de/konzepte/saubere-waermeenergie-fuer-einen-neuen-stadtteil.html>



를 10개의 구역으로 나누고 복합용으로 개발해 도보나 자전거를 통해 하펜시티 내에서 직장과 학교, 문화생활 공간에 접근이 쉽도록 교통계획을 추진하고 있다.⁴⁾

2. 도시에 품은 아동의 꿈과 소망

아동친화 도시개발 또한 하펜시티가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이다. 실제로 하펜시티의 거주인구 가운데 어린 자녀를 둔 젊은 부부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으며, 18세 미만 아동의 비율 또한 22.7%를 차지하고 있다.⁵⁾ 이를 반영하듯 지난 몇 년간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시민은 물론 청소년과 초등학생들의 참여문화가 빠르게 자리 잡고 있다. 특히, 하펜시티를 대표하는 세 개의 놀이터에는 아동이 워크숍을 통해 제시한 아이디어가 실제로 적용되었으며, 카타리넨 학교(Katharinschule) 앞 잔토어공원(Sandtorpark) 역시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조성되었다.⁶⁾

4) <https://www.hafencity.com/de/quartiere/ein-stadtteil-zehn-quartiere.html>

5) <https://www.hafencity.com/de/faq-wohnen-arbeiten/wer-wohnt-in-der-hafencity-.html>

6) <https://www.hafencity.com/de/leben/ein-stadtteil-fuer-die-ganze-familie.html>



▲ 그라스브룩공원(Grasbrookpark) 놀이터 / 자료: ELBE&FLUT



▲ 잔토어카이(Sandtorkai) 놀이터 / 자료: ELBE&FLUT

또한, 하펜시티는 공사 대상지와 생활공간이 관계성을 가지고 어우러질 수 있도록 설치한 방진막에 100여 명의 아동이 참여해 그린 그림 12점을 전시했다. 이외에도 하펜시티는 계절에 따라 아동을 위한 다양한 체육 시설, 공연 및 문화체험 등 야외행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 가운데 ‘꿈을 건축하다(BauTraum)’는 하펜시티가 2006년 여름부터 매년 3주간 개최해온 행사로써 건축 및 도시 전문가, 예술가로 구성된 팀이 주축이 되어 어린이들이 상상하는 공간을 설계하고 건축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어린이들이 어려서부터 공간 계획에 관심을 가지고 미래에 하펜시티, 더 나아가 다양한 도시계획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이다.⁷⁾

이와 더불어 하펜시티는 2020년 아동을 위한 건축교실(Architekturzentrum) 운영을 준비하고 있다. 건축법전에 명시되어 있듯⁸⁾ 아동이 도시계획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도시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교육하려는 것으로, 대상은 유치원생부터 청소년까지이다. 건축과 도시계획에 관한 의견을 나누고 다양한 재료를 통해 실제로 모형을 조성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제공될 예정이다.⁹⁾

교육과 관련해서는 2009년 카타리넨 초등학교를 하펜시티 서쪽 구역의 중심에 조성했다. 서쪽에서 동쪽으로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하펜시티의 경우 카타리넨 학교는 기존 개발 지역의 심장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하펜시티 중앙과 동쪽 구역의 조성이 진행되면서 학교의 확충이 필요해졌다. 이에 하펜시티는 2020~2021년 사이 동쪽 바켄하펜(Baakenhafen) 구역의 중심에 초등학교 1개교 건축을 목표하고 있으며, 하펜시티 완공 이후 도시의 중심이 될 로제공원(Lohsepark) 김나지움과 도시구역학교를 함께 배치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3. 시사점

오늘날 빠른 속도로 변해가는 세상 속에서 하펜시티는 오랜 시간에 걸쳐 자신만의 속도로 한 걸음씩 완성되어 가고 있다. 이에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시대가 요구하는 사항을 유연하게 받아들이며 여유를 가지고 다양한 도전을 시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처럼 시대의 거울 역할을 하는 하펜시티가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가족 친화적인 도시로의 성장을 추구하는 모습은 눈여겨 볼만한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다.

하펜시티는 아동에게 중요한 학교와 놀이시설을 도시 중심에 위치하도록 설계함으로써 도시에 대한 가족들의 소속감과 만족도를 높였다. 또한, 아동의 생활공간을 공원과 강변 등 자연과 가까운 곳에 마련하고 있는 모습에서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아동의 성장을 고려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특히, 아동의 참여를 통해 도시를 대표하는 놀이 및 여가 공간을 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이 체계적으로 도시계획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아동이 일시적이고 단기적인 프로젝트에 참여해 단순하게 좋고 싫음의 의사를 밝히는 것에 그치지 않고 도시의 구성원으로서 소망하는 생활공간을 요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이며, 이를 통해 아동의 참여가 실질적인 의미, 혹은 힘을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하려는 노력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아동의 참여는 현재 눈앞에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뿐 아니라 이러한 참여의 기회를 통해 성장한 아동이 만들어갈 미래의 도시에 대한 투자이며, 더 나아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향한 첫걸음이라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하펜시티가 추구하는 아동친화를 통해 아동과 도시계획의 관계성에 대해 고찰해볼 계기가 되리라 생각된다.

Ⅰ 참고문헌 Ⅰ

1. Netzwerk HafenCity e.V 2014, HafenCity: ein Quartier für alle Lebensalter. Kinder – Jugendliche – Familien.
2. HafenCity Hamburg GmbH 2017, Themen Quartiere Projekte 27.
3. HafenCity Hamburg GmbH 2018, Der HafenCity-Newsletter 49: drei Schulen für die Hafencity.
4. HafenCity Hamburg GmbH 2018, Der HafenCity Newsletter 51.: die Schatzinsel der Hafencity.
5. 건축법전(Baugesetzbuch:BauGB) 제3항.
6. 키크모 함부르크 홈페이지, <https://kiekmo.hamburg/kinder-in-hochform-das-neue-architekturzentrum-in-der-hafencity-30304>
7. 하펜시티 홈페이지, <https://www.hafencity.com/de>.

7) <https://www.hafencity.com/de/veranstaltungskalender/bautraum-kinder-planen-und-bauen-4.html>

8) 건축법전(Baugesetzbuch:BauGB) 제3항.

9) <https://kiekmo.hamburg/kinder-in-hochform-das-neue-architekturzentrum-in-der-hafencity-30304>



인권 A to Z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읽기

김문광 | 충남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장학사

1. 들어가며

1) 목적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이하 '이 조례'라고 함)는, 학교 교육과정에서 학생의 인권이 존중되고 보장·증진되도록 하는 충청남도 교육 자치규범입니다. 이 조례는 학생인권의 실현을 통해 소통과 자율, 배려와 다양성이 존중되는 학교 문화를 형성하고 학생 자신의 인권뿐만 아니라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헌법」 제31조,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교육기본법」 제12조, 제13조, 「초·중등 교육법」 제18조의4, 「유아교육법」 제21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학생인권을 보장함으로써 모든 학생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게 행복한 삶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추진 경과

가. 충청남도의회 김영수 의원(교육위원회) 대표발의(19명) / 2020. 5. 28.

나. 입법예고 / 2020. 6. 2. ~ 6. 8.

다. 교육공동체 공청회 / 2020. 6. 8. 천안교육지원청

라.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조례안 수정안 가결 / 2020. 6. 19.

마. 충청남도의회 본회의 조례안 수정안 통과 / 2020. 6. 26.

바.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공포 / 2020. 7. 10.

사. 충청남도 학생인권위원회 구성 / 2020. 10. 1.

2. 학생의 인권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제2장은 학생의 인권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으며 총 4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절은 자유권에 관한 규정, 제2절은 평등권에 관한 규정, 제3절은 참여권에 관한 규정, 제4절은 교육복지권에 관한 규정입니다.

1) 자유권

「대한민국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생도 인권의 주체인 인간으로서, 누구나 마땅히 가지는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함을 제5조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는 인간의 본질로 인격의 주체임을 의미하며, 학생도 인간이므로 당연히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집니다. 그러므로 학생이라는 이유로 인권보장에 있어서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자유권은 조례의 필수적인 전제이며 학교는 학생의 존엄과 가치를 확인하고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할 의무를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5조(인간으로서의 존엄성)

학생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6조(신체의 자유)

- ① 학생은 신체의 자유를 가지며, 체벌은 허용되지 않는다.
- ② 교직원과 학생은 서로 인격을 존중해야 하며, 폭언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 ③ 교직원은 학생에게 교육 목적과 무관한 일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제7조(양심과 종교의 자유)

- ① 학생은 세계관, 인생관 또는 가치적·윤리적 판단 등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제8조(표현과 집회의 자유)

- ① 학생은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동기와 신념을 지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9조(개성을 실현할 권리)

- ① 학생은 두발 등 용모와 복장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의 장은 두발 등 용모와 복장에 대하여 학칙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 학생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제10조(사생활과 개인정보를 보호 받을 권리)

- ① 학생은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보호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1조(정보접근권)

-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이 학교도서관 이용 규정에 따라 학교도서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12조(정보열람과 공개청구권)

- ①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 본인의 학교기록에 대해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보호를 받을 권리)

- ① 학생은 학교에서 모든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4조(징계에 대한 적법절차의 권리)

- ① 학생에 대한 징계절차는 학생인권을 존중하여 학칙으로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2) 평등권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제2절은 학생인권 중 학생의 배움과 학습에서 평등한 기회를 제공받을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 평등권을 보장하고, 학교의 장은 성인지 교육의 실시와 차별에 대한 이익제기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평등권 보장에 관한 조항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은 전문에서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평등의 원칙은 기본권 보장에 관한 대한민국헌법의 핵심 원리로서 조례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15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 ① 학생은 학교에서 배움과 학습의 평등한 기회를 제공받아야 한다.

제16조(성인지 교육의 실시 등)

-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성인지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그 성과를 반영하여 교육활동에서 성평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7조(차별에 대한 이익제기)

학교의 장은 차별에 대하여 이익을 제기한 학생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참여권

조례 제3절은 학생인권 중 학생 등의 의견제출권, 학생자치활동과 참여의 보장, 학칙 등 학교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에 참여할 권리,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할 권리 등 참여권보장에 관한 조항입니다. 학생은 단순히 교육대상이 아니라 「대한민국헌법」 제10조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인격권의 독자적 주체이며, 그 인격은 성인과 마찬가지로 보호되어야 합니다. 또한 학생의 참여권은 학생들에게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필요한 자질을 갖추 수 있는 것으로 우리 교육이 추구하는 교육이념이기도 합니다. 조례는 학생의 참여권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18조(학생 등의 의견제출권)

- ① 학생의 의견은 학년이나 나이에 상관없이 존중되어야 한다.

제19조(학생자치활동과 참여의 보장)

- ① 학생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자치활동을 위한 학생회, 학급회, 동아리 등 학생조직(이하 “학생자치활동조직”이라 한다)을 민주적으로 구성·운영할 권리를 가진다.

제20조(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에 참여할 권리)

- ① 학생은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21조(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 ① 학생자치활동조직 및 학생들의 자발적 결사는 학생의 권리와 관련된 정책에 대하여 교육감 및 학교의 장에게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22조(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할 권리)

- ① 학생은 학교운영에 관한 의견을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4) 교육복지권

개인적, 사회·경제적 특성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에게 안정된 교육 환경을 마련하는 것은, 모든 학생에게 교육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교육과 복지에 관한 권리는 개별적 차원이 아니라 교육복지권이라는 통합적 영역으로 다루어야 합니다.

학교는 학생이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으로 건강하게 자라고 자신의 잠재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아동의 총체적 삶을 염두에 뒵야 합니다. 모든 학생이 복지권을 보장받는 속에서 자기 삶의 주체로서 인정되고 하나의 온전한 인격으로 대우받는 학교생활을 통해 소외된 타인에 대해 연대하고 그들을 연민할 수 있는 따뜻한 감성을 갖춘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교육복지의 개념은 “모든 학생들에게 각자의 특성에 맞는 교육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공평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개인 및 사회·경제적으로 발생하는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교육소외와 교육 부적응을 해소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¹⁾ 본 절은 이러한 교육복지가 학생들에게 보장되어야 할 기본권임을 명시하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1) 신희정, “교육복지정책 및 법제화 논의 분석을 통한 교육복지의 발전 방향”, 교육협학연구 제25권 2호, 2013

제23조(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

① 학생은 양질의 교육을 받고 학생인권이 보장되는 적절한 복지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제24조(쾌적한 교육환경과 건강권)

① 학생은 쾌적한 교실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25조(학교급식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조리된 학교급식을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26조(안전권)

① 학생은 신체, 생명, 재산 등에 대한 안전보장의 권리를 가진다.

제27조(휴식과 문화의 권리)

① 학생은 휴식과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와 문화공간을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28조(소수자 학생의 권리)

①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과 교직원은 빈곤가정 학생, 장애가정 학생, 한부모가정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외국인 학생, 운동선수 학생, 성소수자 학생, 일하는 학생, 임신·출산 학생 등 소수자 학생(이하 “소수자 학생”이라 한다)이 그 특성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를 적정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학생인권의 보장기구와 구제 절차

제3장은 학생인권의 보장기구와 구제 절차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으며 총 3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절은 충청남도교육청이 운영하는 학생인권위원회와 학생인권옹호관 제도를, 제2절은 학생인권침해의 구제 절차에 관한 규정, 제3절은 학생인권교육과 홍보에 관한 규정입니다.

1) 학생인권위원회

제1절은 학생인권위원회와 학생인권옹호관과 관련된 조항으로 학생인권 증진을 위해 충청남도 교육청에 학생인권위원회를 두고, 학교에는 학교학생인권위원회를 둘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충청남도교육감은 학생인권옹호관을 학생인권센터의 장으로 하여 학생인권을 보장·실현하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 하였습니다. 또한 학생인권 보장 및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 수립에 필요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충청남도학생인권의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례에는 단위학교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실현하기 위하여 학교학생인권위원회를 설치하며,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충청남도교육청에 학생인권위원회가 설치되지만, 학생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실현하기 위하여 학교에 학교학생인권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한 것입니다.

제29조(학생인권위원회)

① 교육감은 학생인권을 보장하고 실현하기 위한 심의기구로서 충청남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이라 한다)에 충청남도학생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1조(학교학생인권위원회)

학교의 장은 학생인권을 보장하고 실현하기 위하여 학교학생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며,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2) 학생인권옹호관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인권교육센터의 장으로서, 학생인권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합니다. 학생인권옹호관은,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근거를 둔, 일종의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옴부즈퍼슨(Ombuzperson)²⁾’으로 조례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제32조(학생인권옹호관)

① 학생인권옹호관은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 중 하나를 갖춘 자 중에서 공개모집절차에 따라 교육감이 임명한다.
⑤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인권에 대한 「대한민국헌법」과 관련 법령 그리고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비롯한 국제인권규범의 정신에 따라 그 직무를 독립적으로 성실하게 수행해야 한다.

제33조(학생인권옹호관의 직무)

- ① 학생인권옹호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학생인권 관련 실태조사
 - 2. 학생인권에 관한 정보·자료의 조사·수집·정리·분석 및 이를 통한 정책, 지침 등의 연구·개발
 - 3. 학생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조사 및 직권 조사
 - 4. 학생인권을 침해받은 피해자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 운영
 - 5.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적절한 시정 및 조치 권고
 - 6. 학생인권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권고
 - 7. 학생인권에 관한 홍보
 - 8. 위원회 및 충청남도학생인권회의의 업무 지원
 - 9. 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의 집행
 - 10. 학생인권영향평가서 작성
 - 11. 소수자 학생 등을 위한 진로와 취업 프로그램, 상담프로그램 운영
 - 12. 그 밖에 학생인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2) 아동의 권리가 침해당했을 때, 아동의 대리인으로서 고충을 접수하고, 중립적 입장에서 조사하여 필요한 경우 시정조치를 권고하는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거나 구제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하는 대리인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인권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할 수 있고, 학생인권 관련 정책을 연구·개발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학생인권 침해와 관련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구제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인권침해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될 때, 학생인권옹호관이 직권으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조사를 한 결과, 침해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인권침해를 한 사람이나 기관에게 이에 대하여 시정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학생인권센터

제34조는 학생인권옹호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에 학생인권옹호관을 ‘장’으로 하는 학생인권센터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생인권센터는 학생인권옹호관을 중심으로 학생인권 전반에 대한 일을 수행합니다. 센터에는 상담조사관을 두어 실질적인 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학생인권센터가 수행하는 주된 임무는 이 조례 제33조의 학생인권옹호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학생인권 관련 실태조사 및 학생인권에 관한 홍보, 학생인권에 대한 침해가 있다는 신청이 접수되거나 혹은 그러한 사건을 접하게 되었을 때 그 사건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사 결과 학생인권침해의 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그 구제방안을 마련하거나 혹은 제도적·구조적·정책적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학생인권옹호관이나 학생인권위원회, 혹은 교육감 등이 정책수립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와 조언을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제34조(학생인권센터)

① 교육감은 학생인권옹호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으로 도교육청에 학생인권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센터의 장은 학생인권옹호관으로 하며 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4. 나가며

인권은 세계적으로 거스를 수 없는 인류 보편의 가치입니다. 우리 학생 역시 권리를 유예해야 할 미성숙한 존재가 아니라 보편적 인권을 가진 동료 시민으로 존중해야 합니다. 충남교육청은 조례에서 명시하고 있는 내용을 인권교육을 충실히 수행하여 현장에서 학생인권에 대한 담론이 폭넓게 형성되고 인권감수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 이 글은 충남교육청에서 준비 중인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해설서」의 내용을 발췌 요약한 것으로 「충남교육(197호)」에 실린 원고를 일부 수정한 것입니다.

NEWS

열린충남 SPRING VOL.92
연구원 소식

01 충남연구원, 연구성과 발표회 및 지역균형 뉴딜 특강 성료

충남연구원(원장 윤황)은 연구성과의 대외 확산과 정책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2020년도 연구성과 발표회'를 충남도서관에서 개최했다.

2월 23일 열린 이번 행사는 먼저 충남형 뉴딜의 과제와 방향을 모색해 보기 위해 조대엽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장이 “한국판 뉴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주제로 기념 특강을 했다.

특강에서 조 위원장은 “한국판 뉴딜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당면한 방역위기, 경제위기, 공동체위기 등에 대응하고, 21세기 대한민국을 디지털경제시스템, 그린사회생태계, 휴먼공동체로 전환시키려는 초정권적 국가혁신전략”이라고 소개하며 “한국판 뉴딜의 성공은 지역 균형발전과 분권에 기반한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할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탈탄소경제로의 전환 등을 위한 남북협력모델을 모색하는 ‘한반도 뉴딜’로 확장하는 방안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부 전략연구과제 성과 발표회에는 충남연구원의 2020년도 전략연구과제 24개에 대한 발표와 토론을 가졌다. 특히 연구실별 아젠다 과제로 추진되었던 △충남도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과제: 외국인근로자, 결혼이주자, 북한이탈주민을 중심으로 △충남형 뉴딜 방안 모색: 일 자리 편 △인구감소시대에 대응한 농촌지역정책 구상 △포용사회를 향한 충청남도 생활취약지역 실태분석 및 정책과제 등 4개 연구를 중심으로 발표가 진행되었다. 또한 나머지 20개 전략연구과제 역시 소규모 행사장으로 나뉘어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윤황 충남연구원장은 “연구성과의 확산과 정책 활용이 없다면 캐비닛 속 연구일 뿐”이라며 “앞으로 보다 다양한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하여 적극적인 연구성과 환류를 통해 충남도정을 선도하는 정책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충남도 김용찬 행정부지사, 충남도의회 김명선 의장을 비롯한 기획경제위원회 안장현 의원(위원장), 이공휘 의원, 방한일 의원, 이선영 의원, 중도일보 최정규 사장, 충남도 강인영 정책보좌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이상수 팀장 그리고 충남도 및 시군 관계자와 전문가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NEWS

열린충남 SPRING VOL.92
연구원 소식

02 충남연구원, 2021년도 전략연구과제 본격 시동

충남연구원(원장 윤황)이 올해 전략연구과제를 최종 선정하고 본격적인 연구에 나섰다고 3월 3일 밝혔다.

전략연구과제는 중장기 충남도정 전략을 담아내는 연구원의 대표적인 정책과제로 이번에 선정된 과제는 총 20건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충남도와 시군에서 제안한 10개, 연구단 4개, 연구실 6개 등이 선정되었다.

연구원은 전략과제 선정을 위한 수요조사에서 도 및 시군 31건, 원내 연구진 23건, 도의회 1건 등 총 55건을 접수했다. 지난 2월 최종 과제 선정위원회를 개최했고, 이후 충남도-충남연구원 확대 정책협의회를 갖는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기도 했다.



충남연구원 2021년도 전략연구과제 최종연설회 모습

윤황 충남연구원장은 “전략연구과제는 충남도 정책의 기반을 다지는 중요한 연구”라며 “무엇보다 우수한 연구성과의 정책 활용에 초점을 맞춰 도정 패러다임 변화를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연구원은 최근 2020년도 전략연구과제 연구성과 발표회를 충남도서관에서 가졌으며, 올해 추가로 조사된 전략연구과제는 3월 중으로 심의·선정을 완료하고 즉시 연구에 착수하는 등 충남도 정책 대응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충남도-충남연구원 확대 정책협의회 모습

NEWS

열린충남 SPRING VOL.92
연구원 소식

03 충남연구원, 2021년도 업무계획 보고회 가져 : 민선 7기 4년차 정책연구와 안정적인 연구원 경영에 역점

충남연구원(원장 윤황)이 2021년 충남도 정책연구 성과를 높이기 위한 본격적인 연구에 들어갔다.

연구원은 1월 20일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윤황 원장과 이인희 기획경영실장 등 연구실장 및 부서장, 센터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한 긴급 정책연구와 연구원 중장기발전계획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해왔고, 자체 조직진단위원회를 적극 운영하는 등 투명한 연구원 경영에도 역점을 둔 한 해였다고 자평했다. 다만 연구성과의 적시적 공유와 확산을 위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점을 아쉬움으로 남기기도 했다.

이에 연구원은 △선도적 중점 과제에 대한 중장기 전략연구 강화 △정책지식생태계 발전을 이끄는 협력 플랫폼 구축 △연구역량 강화와 결집을 위한 인적·제도적 개선 등을 올해 핵심 운영방향으로 설정했다.

세부적으로는 민선 7기 4년차 정책을 뒷받침하는 선도적 연구에 집중하면서 뉴노멀 시대에 대응한 중장기 미래연구도 착수하기로 했다. 또한 연구원이 그동안 축적한 정책아이디어와 연구데이터를 모두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가치 ‘정책데이터뱅크’를 구축하기 위한 연구단도 설치했다.

그리고 연구원 부설 센터들의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체계를 구축해 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윤황 충남연구원장은 “올해도 코로나19의 영향은 피해갈 수 없겠지만, 책상에서만 하는 연구가 아닌 현장 중심의 정책연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반증을 체감했다”며 “충남도민의 더 행복한 삶을 열어가는 선도적인 정책 활용도 높은 연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여기까지 오느라
내내 고생이 많았다고
토닥이며 너를 맞아야지
어서와 봄.

글, 사진 이민우
@태안 천리포수목원